

제365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9년1월18일(금)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관련 현안보고

상정된 안건

1.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관련 현안보고 2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명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위원님들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사·보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월 18일 자로 윤종필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성일종 위원님이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오신 데 대해서 감사와 환영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단히 성일종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친정이 그리워서 온 성일종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참 귀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가져오신 것 같은데 한번 우리 국민들의 노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잘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말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서 현안보고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시대

상황을 맞이해서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와 시각이 있습니다.

연금과 관련해서 국민들 대부분은 연금재정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를 하면서 떨어진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연금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만들라 이런 주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현행 제도의 변경이나 노후소득보장 강화 여부,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연금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과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는 국회로 넘어온 연금제도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오늘 현안보고를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될 국회 차원의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보다 국민들에게 많은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국민연금 방안이 정리가 되도록 힘을 보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현안보고를 통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동안 들어왔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잘 전해 주시고 앞으로 국민연금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 설정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인 개진을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소관 실·국과 국민연금공단 측 관계자만 참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의의 중계방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방송으로 계속 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1.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관련 현안보고

(10시06분)

○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관련 현안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는 먼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들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작년 12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작년 제출하신 연장을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위원님들께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취지와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 재정계산위원회 논의를 통한 자문안을 마련하였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차 종합운영계획은 과거 1~3차 종합운영계획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 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으며 기존의 재정안정화 대책 중심에서 벗어나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일방적 연금개혁이 아니라 지역별·연령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고 다양한 정책 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

습니다.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지난 2007년 개혁 이래 약 10년 만에 논의되는 것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인구정책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하십시오.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국민연금 재정계산 개요 및 추진 경과입니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1998년에 도입되었고 2018년에 네 번째 재정계산이 실시되었습니다.

17년 8월부터 재정추계위원회를 시작으로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18년 8월 공청회에서 자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제도개선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여 정부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협의 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2월 26일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18년 10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입니다.

18년 9월부터 10월간 주요 대상별 간담회,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및 전화설문 등을 통해 국민연금 개선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습니다.

국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투명한 기금운용 등 국민연금의 신뢰도 제고 필요, 제도 내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 필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서는 상반된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화설문 결과 국민의 3분의 2는 현재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구체적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절반은 현 제도 유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재정안정성 강화 방향에 대한 의견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국민의 의견에 기반한 제도개선의 원칙입니다.

국민이 공통적으로 원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도 제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정부 역할 강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등에 대해서는 단일한 내용으로 종합운영계획에 담았습니다.

상반되고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고려하여 복수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현행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체계를 유지하면서 기초연금 강화 등을 추진하는 현행 제도의 유지,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보험료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1%p씩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 등입니다.

4쪽입니다.

구체적인 공적연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도 제고입니다.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법에 규정된 연금 급여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입니다.

먼저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둘째아부터 지원되던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지원되고 있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사업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을 인상하여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고용부 등 관련 부처의 근로자성 인정 등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장 가입 전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급여제도 내실화 부분입니다.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고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분할연금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분할 시점을 기존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서 이혼 시점으로 변경하고 최저 혼인기간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연금수급 개시 후 조기 사망하는 경우에도 본인 소득의 4배 수준의 최소 금액을 보장하도록 사망일시금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및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계층 하위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액을 인상하고 2021년 30만 원 인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을 활성화하여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정부 내 협의체를 운영하여 다층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원활한 기금운용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해외투자 확대, 대체투자 집행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산 배분을 추진하여 기금의 수익성을 한층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본부가 기금운용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운용인력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의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위원회를 상시 운영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도 개편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에서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이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현 수준의 퇴직금을 포함하는 공적연금을 통해서 25년 정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저 노후생활 보장 목표를 약 1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좀 더 발전된 퇴직연금, 사적연

금을 포괄한 다층 체계를 통해 적정 노후생활비 약 150만 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2018년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 1인가구의 은퇴 후 최소생활비가 약 95만~108만 원, 적정생활비가 약 137만~154만 원인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적연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은 30만~40만 원의 범위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고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러한 조합 속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4개의 정책 조합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현행 유지 방안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수렴 결과 국민의 절반 정도가 현행 수준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소득대체율 40% 및 보험료율 9% 체계를 유지하되 앞서 말씀드린 급여·가입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우선 추진하여 실질소득대체율을 제고시키는 방안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강화 방안입니다.

현행 유지 방안과 같이 현행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체계는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현행 유지안에 비해 현재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을 더욱 두텁게 하여 노인빈곤을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다음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입니다.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이와 함께 재정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인상하여 2031년에 12%까지 인상하는 안입니다.

보다 노후소득보장을 강조한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인상하여 2036년에 13%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각 정책 조합 방안의 효과는 밑의 표와 같습니다.

9쪽입니다.

네 가지 정책 조합 방안의 노후소득보장 및 재정 지속가능성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1·2는 평균소득자가 25년 가입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약 100만 원 수준의 보장이 가능합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1·2는 현재보다 기금

소진 연도가 연장되며 이는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추가적인 계획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특히 재정안정화를 추진하면서도 보험료율을 5년에 1%씩 인상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빈곤 해소와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기본적인 방향 아래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지속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및 경제사회적 정책변수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제도적인 변화 외에도 출산율 제고,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소진 시점을 연장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출산 대책,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본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인데……

○김순례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김순례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김순례 위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국민적인 관심도가 아주 드높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보고받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받기 이전에 관련된 사안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기금운용위에 참석하셔서 대한항공 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표명을 하시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고 밝히신 바를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용하여 정부의 대기업 길들이기를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언론의 보도가 연이어서 있습니다. 부패 덩어리로

전략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는, 담보되지 않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로 임원 선임·해임, 정관의 변경 그리고 회사 합병 등에 과도한 정치 개입을 정부가 주도한다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을 하게 되는 4개의 개편안을 보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약속하셨던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2200만 명 가입자의 노후 보장을 하고 있는, 책임질 수 있는 내용이기에도 심도 있는 논의가,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초연금을 올리면 세 부담 없이 늘어나는 것이고 보험료율을 올리면 월급에서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공약은 공약의 파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화문 대통령집무실의 백지화, 미세먼지 저감 실패에 따른……

○**김상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김순례 위원** 국가적인 대응이 없고 이런 국민연금의 개악까지 한 것은 공약 파기가 아닌가, 지금 대통령의 의중을 들고 나온 정부부처에 있는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주무장관의 대국민 사과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이 복지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적어도 장관으로부터 오늘 소집된 이 회의에 앞서서 공약을 파기한 대통령과 이에 따른 정부부처의 대국민 사과 발언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기동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동민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좀 공정하게 운영을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회의가 소집된 과정들이 있잖아요. 여야 간에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해서 전체 회의일정도 속개하지 못하는데 지난주에는 보건복지위가 유일하게 임세원 의사 관련해서 긴급현안보고를 받았고 또 이번 주에 이어서 국민연금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것은 무슨 정치적 공방을 펼쳐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그리고 당장 필요한 국민들의 보건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뭔가 합리적인 대안들을 찾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마련된 상임위원회고 긴급현안보고인데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백한 정치적 발언인 거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위원들이 모두 할 말이 있을 거고 장관 역시 할 말이 계속 텐데 원활하게 그리고 애초의 취지에 맞게 회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김명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연 위원** 의사진행과 관련되어서, 저는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께서 주무장관과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위원들의 질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의사진행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늘 우리가 질의하는 시간을 이렇게 제한하고 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

본 위원도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생각이 없었으나 지금 보고를 받고 나서는 울컥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국무회의 심의하고 대통령 승인하고 나서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민감한 내용들, 이 의사결정이 되기 전에 대통령께서 이것을 결심하고 안을 수용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지 국민들에게 전달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민감한 것들은 쪽 빼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엄청나게 국민연금기금 소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소득주도성장, 지금 국민들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이거 인정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많은데 보건복지부에서 연금정책 이거 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갖다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 이런 보고나 하자고 지금 상임위가 개최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만큼은 자유롭게 의사진행 발언이든 본질의든 할 수 있게끔 수용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정춘숙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정춘숙 위원 오늘 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이미 구체적인 내용들을 상임위에서 의논하고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어떻게 회의를 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이에 맞추어서 잘 운영해 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질의를 해서, 사실 질의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질의시간에 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수 신동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승희 위원 아니, 왔다 갔다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신동근 위원 그럼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명수 그러시겠어요? 김승희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김승희 위원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께서 사실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대통령과 소관 부처가 네 가지 사지선다형을 제출하면서 무책임하게 이렇게 국회에 공을 던진 것, 또 덧붙여서 공약에 대한 실현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부분이 없으면서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앞으로 출산율과 경제성장률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장이라는 것은 경제성장률을…… 지금 거의 경제 실패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것에 저도 굉장히 분개를 합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던지고 국회에다 공을 넘긴 것에 대해서 사실은 주무장관으로서 이에 대한 사죄 그리고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돼야 된다는 김순례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것을 개편할 때도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정치적인 공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심히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질의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것이 논의가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무책임한 개편안 사지선다형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의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신동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동근 위원 빨리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발언하니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가 말 그대로 그 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들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 의견은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정쟁의 장으로 이끌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난주 수요일 날 존경하는 이명수 의원님께서 주관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진단과 대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렇게 상임위가 잡힐 것이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위원장님께서, 그것도 위원도 아니고 하셨는데 포스터에 ‘무책임한 文 정권, 부담은 미래세대’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하면서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저는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님으로서 이게 과연 타당한 일인지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난에 앞서기 전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2015년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당시의 합의사항이 뭐였습니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하고 또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재정절감분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자 이렇게 다 합의했었지요,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행됐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다시 말해서 새누리당이 반대해 가지고 전혀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던…… 아무리 망각의 동물이 라고 하지만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고 이런 정치적 정쟁의 장으로 가져가는 게 저는 옳은지……

○김승희 위원 현실성이 없으니까 그것을 반대를 한 건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지.

○신동근 위원 아니요,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저는 2015년에 합의된 것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지금 이런 논의도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10년 동안에 그러면 그 정권 당시에는 과연 합당한 그런 연금개혁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문형표 장관 당시에는 요율을 18.8%까지 올려야 된다고 그런

공포적인 마케팅이나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안을 내서 국민적인 합의로 가고자 하는데 이렇게 시작부터 정쟁으로 이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성일종 위원님 말씀 신청했으니까 먼저 하십시오.

○성일종 위원 우선 회의가 참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한테 기동민 간사님, 김순례 위원이 처음 의사진행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의사진행발언 들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위원장이 객관성을 유지하라고 그러니까? 들어 봐서 문제가 있으면 잘못됐으니 똑바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격려하고 더 축하하고 해야 할 일들입니다. 위원장도 국회의원 신분으로서의 위원장인데, 예를 들면 방향이 잘못됐는지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 하고 세미나 하는 것까지 문제를 삼으면 위원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위원장한테 공개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해 달라고 하는 요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것까지 문제를 삼는 것은 위원장에 대한, 정말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신동근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하고 있는 본분에 대한 역할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넉넉하고 야당의 의견에 대해서는 녹여내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당 하기가 야당 하기보다 어렵잖아요. 또 그 시대를 이끌어 가면서 개혁에 대한 책임도 여당한테 있는 것이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야당이 하는 거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매듭을 짓는 것은 여당의 몫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정부가 내놓은 것……

또 대통령께서 사실 과한 공약을 한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 인상 없이 설계를 잘하면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 있다라고 대통령께서 4월 19일 날 TV 토론회에 나오셔서 가지고 후

보 시절에 얘기를 하신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잘됐는지 잘 안 됐는지, 맞는지 방향이 옳은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정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과하다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명수 의사진행발언을 더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만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을 존중하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런 입장이고요. 사실 의사진행발언은 들어 봐야 알지 사전에 협의되거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판단과 의견을 하시겠습니까만 의사진행발언은 서로 존중해 주고, 다만 아까 말씀한 대로 의사진행발언과 본질의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한 토론회에 대해서는 시민단체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실 텐데 어쨌거나 이것에 관해서는 찬성이든 반대든 국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 보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다른 뜻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앞서 협의한 대로 1차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 장관님, 작년 11월 7일 대통령에게 국민연금 개편안 보고했다가 퇴짜를 맞으셨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중간보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때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상임위……

○김승희 위원 ‘좀 더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김승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 가지고 수정한 게 지금 네 가지 개편 방안이에요. 1안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할

때 여러 가지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으셨는데, 1안은 현행이잖아요. 현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개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개편 안 하겠다는 것을 개편안에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안은 뭐냐 하면 국민연금을 개편하는 것은 손을 안 대고 그대로 현행 유지를 하고 기초연금을 22년 이후에 40만 원으로 올린다 이런 안이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김승희 위원 2022년이면 20대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좀 답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듣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러면 대선 이후에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대선 전에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뜻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 습니다. 방향성만 제시를 한 겁니다.

○김승희 위원 방향성을 제시한 것도…… 아닙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방향성만 제시한 겁니다.

○김승희 위원 지금 40만 원 인상에 대한 재정 부담은 차기 정부가 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게 차기가 될지 차 차기가 될지는 40만 원……

○김승희 위원 어쨌든 이번 정부는 아니잖아요, 22년이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이번 정부는 30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22년이면 초반에 정권이 끝나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승희 위원 그런데 생색은 내놓고 그것에 대한 재정부담, 미래 부담은 다음 정권에다 떠넘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재정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당연히 필요합니다.

○김승희 위원 그래서 다음 정부가 공약으로 내놓아서 그것에 대한 국민의 선택이 필요한 건데 이것도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1안은 개편 안 하겠다는 개편안, 2안은 개편 안 하겠다는 개편안

에다가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생색내겠다는 안입니다.

그다음에 3안·4안 이 2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 이런 말씀 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승희 위원 그러면 3안·4안 중에서 장관님이 선호하는 안은 어떤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위원님 말씀 다 끝나시면, 시간을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아니, 선호하는 안이 어떤 거예요,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특별히 어떤 특정안을 지지하거나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승희 위원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재정추계를 잘 살펴 가지고 최적의 안을 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에요. 최적의 안을 났어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수정·보완할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놓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4개를 해 놓고 2개는 개편하지 않겠다는 안을 집어넣어 났어요.

그리고 3·4안만 개편안 조금 들어갔는데 이것도 ‘어느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던져 놓으니 너네가 알아서 좀 해 달라’ 이게 주무부처 장관의 태도로서 맞다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 주요 질문을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김승희 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안의 경우에 소진 시점이 언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3안은 2063년입니다.

○김승희 위원 언제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2063년.

○김승희 위원 그렇지요, 63년이에요. 4안은 62년이고, 63년 이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장관님께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엄청 많이 질의를 했고 그때 기금이 소진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승희 위원 그러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그 비용부담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게 지금 추정치에 따라 다르지만 약 20% 내외 됩니다.

○**김승희 위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45%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게 수익률을 1로 났을 때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2배 정도 인상해야 되는 그런, 18% 정도는 되어야 소득대체율 그대로 놓고, 이렇게 되어야 이게 내가 낸 돈 그냥 받아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험료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9%잖아요. 조금 더 올린다 그랬어요, 5년마다 1%씩. 이렇게 되면 사실상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는 한, 그리고 출산율이 높아져 가지고 이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증가하지 않는 한 기금은 소진되게 되어 있거든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그것에 대한 비용률이 30% 이상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에요. 그러면 내가 낸 돈을 그대로 받아 갈 때의 보험료율이 18%인데, 내가 낸 돈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 30%의 보험료율을 낸다 그러면 더 많이 내고 덜 받아 가는 그런 보험을 누가 가입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개편안에 대해서는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그런 대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구라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아니요, 제가 위원님 질문이 끝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김승희 위원** 제가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허구가 있어도 제가 또다시 질문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단답으로 간편하게 좀 말씀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러면 첫 번째부터 좀 답변을 드리면, 현안 유지안이 허구다 하고 무책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안 유지안은 이번에 제시된 개편안의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공통된 의견에 대해서는 개편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라든지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아까 요약본에도 나와 있지만 1번부터 4번까지의 설명은 여러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담았습니다. 다만 소득대체율하고 보험료율에 대해서만 네 가지 안을 제시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정부안이 무책임하게 나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안에 담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희 위원** 개편을 안 하면 현행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개편안에 개편 안 하겠다는 안이 개편안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서만 1안은……

○**김승희 위원**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국민이 원한다 하더라도, 국민이 원하면 개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행 유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현행안이 개편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개편안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통안에 대해서는 개편 내용을 넣었고, 국민들 의견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만 네 가지 안으로 선택지를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왜 이것을 그러면 단일안을 내놓지 않고, 소득대체율하고 연금보험료율에 대해서도 단일안을 냈으면 좋았을 텐데……

○**김승희 위원** 최적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왜 이것을 네 가지 안을 냈느냐, 저는 그대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개편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장관님, 먼저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정춘숙 위원**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책임성 없게 4개의 안을 제시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굉장히 생각이 다릅니다. 보험료 부담이 되어서 현행 유지를 바라는 국민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고 또 소득보장 강화를 더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재정안정화를 바라는 상반된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국회에 제출하셨다는 것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정안정화 방안이 미흡하다 그런 의견도 있는데 보험료 부담이 된다는 국민들에게 당장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주장한 대로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5년마다 1%p씩 올린 이런 안들은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고요, 재정안정화 방안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본말이 전도돼서 제도의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장관님께서도 제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PPT 좀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번째인데 기초연금 강화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그대로 두되 기초연금만 40만원으로 올리자는 거지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험료에 대한 추가 부담 없이 40만 원 올리자는 건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험료 인상 없이 수급액이 많아지니까 가장 많이 선호하기도 하는 방안인데요.

그런데 기초연금 40만 원은 국민연금 최고 소득자가 10년을 납부해도 받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10년 납부해도 37만 원 정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정춘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을 안 내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견은 현재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지난 9월에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회의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에서는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제도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가입 자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납부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납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도 많이.

그리고 현재 384만 명의 지역가입자 중에서 소득 자료가 없어서 강제로 부과를 못 하는 사람이 147만 명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장기 체납이 여기에 보시는 대로 97만 명이나 되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해서 전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도록 만든 제도가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정춘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들이 기초연금 일정하게 되니까 국민연금 안 내겠다 이렇게 했을 때 별다른 방법이 없는 거지요. 국민연금을 납부를 안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노후 생활 보장이 굉장히 불균형되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아무 대책 없이 기초연금 40만 원까지 올린다고 하면 대규모 미납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어떤 대안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초연금 강화 방안이 최종적으로 고려된다고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종합계획안에서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본 건데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선 저소득 자영업자한테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대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제가 국회에 와서 제일 먼저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경제가 좋지 않아서 자영업자들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부담을 덜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PPT 보시면 아시다시피 왜 납부예외자들에게만 보험료를 지원하느냐라고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납부예외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없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만 예외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소득자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통계 보면 348만 명 납부예외자 중에서 사업장 휴·폐업, 실업자, 군인, 학생, 재소자 해서 무소득자가 97%예요. 소득이 없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람들은 보험료

를 50% 지원을 해 줘도 누가 돈을 주지 않으면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부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의 보험료 지원을 누가 해 준다 그러면 이게 유소득자가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물론 일부 재해나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사람은 인정해 주지만 굉장히 일부고요. 그래서 실제 지원대상이 굉장히 적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두루누리사업 지원기간은 3년인데 반대로 이번에 미납자들에 대한 보험료 납부는 1년이에요.

그래서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납부예외자에게만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의도했던 것보다 효과가 없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소득 자료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납부예외자만이 아니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야 된다, 그래야만 실제로 이 제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정책을 구체화시킬 때 기재부하고 의논하셔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원해 줘도 보험료 낼 수 없는 사람에게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너무 작아서 제도의 효과가 없고요. 그래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금 190만 원 이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지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100만 원 미만도 굉장히 많고요. 100만 원 이상 190만 원의 경우에도 3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을 좀 타깃으로 해서 정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이 납부예외자의 보험료를 지원하겠다 할 때 기본적인 생각은 실업자입니다. 실직 가입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위원님께서 학생이라든지 군인까지 다 포함을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가 두루누리사업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역가입자는 그런

부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사업장가입자처럼 두루누리사업과 같은 그런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정춘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 위원 보건복지부, 2019년 들어서 첫 회의인데 올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잘 행정이,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인데……

장관님, 재정안정 방안 없는 국민연금 개편안은 폭탄 돌리기보다 더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柳在仲 위원 그것도 김상균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의, 아주 전문가의 주장인데 그분 말씀은 ‘대통령께서 안이한 인식을 빨리 바꿔야 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장관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분도 아니고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께서 이렇게 강력히 비판할 정도의 개편안을, 무책임한 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국회에 와서 논의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어불성설이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화면을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화면을 보셨습니다만 정부안에 이 공약을 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솔직히 이야기해야지요. 자꾸 이렇게 속이려고 하지 말고 솔직히 국민들한테 이것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공약도 못 지켰다는 것을 사과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방금 위원님이 보여 주신 것은 공약은 아니고 대선토론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신데……

○柳在仲 위원 아니, 토론 과정이라도 하겠다는 것은 공약이지, 이야기지. 그렇게 넘어가서 되겠어요? 국민들을 왜 그렇게 속이려고 그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아니, 국민들을 속이고 하는 차원은 전혀 아니고요.

○**柳在仲 위원** 결과가 그렇잖아요. 그래도 국민들한테는 ‘정권을 맡아 보니까 재정안정성이 없고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니까 힘들다. 국민들도 부담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또 변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적어도 저희들이 이번에 제시한 네 가지 개혁안 안에는 보험료율 인상 없이 50% 되는 것은 없습니다.

○**柳在仲 위원** 장관님은 언제까지 장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국회에 공을 던져 버리고 이렇게 지나고 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정부안이 얼마나 무책임한 안인지 기초연금 연계안을 중심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돼.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1안 기초연금 30만 원은 이미 지난해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국가재정계획에 포함된 안이지요? 새로운 안이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柳在仲 위원** 그렇지요? 보시는 자료는 국가재정계획에 포함된 기초연금 지출전망인데요. 22년 기초연금 지출이 작년보다 6조 원이나 더 많은 15.5조 원으로 연평균 14.2%나 크게 늘어나는데 국가재정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또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안도 재정적 부담이 큰데 40만 원 지급을 국가재정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나요?

다음 자료는 복지부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제2안,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안에 대한 재정추계인데요. 시행 첫해인 2022년의 30만 원 지급안보다 무려 7조 원 가까운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고 10년쯤 후인 2030년에는 한 해 50조가 넘고 20년 후인 2040년에는 1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야 하는데 장관님은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정말 무책임한 안이다, 이것은 그냥 미래세대에 떠넘겨 버리고 시간만 지나면 되겠다…… 그리고 이 정부는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고 우리 있을 때 현금 지급만 하고 부담은 미래세대에 저러, 이런 무책임할 때는 아니지요.

또 중앙정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초연금 23%를 부담해야 할 지자체들이 엄청난 재정을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올해 지자체 부담액이 3.5조 원이고 2022년에 6.2조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재정지원 방안도 검토도 안 하고 기초연금 확대 방안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정부가 방안을 마련하려면 재정대책이 함께 동반되어야 하고 또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요? 그런 자료도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안을 국회에 딱 던져 놓고는 심의해라, 나중에 잘못되면 국회의 책임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좀 불러일으켜요.

장관님, 올해 우리 복지예산이 72.5조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안을 포함시킨 것은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려고 노력했는데 국회가 반대에 어쩔 수 없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의도가 아닌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지난 정부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청와대만 바라보지 마시고 대통령을 설득하시고 국민에게 솔직하게 국가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재정안정성 바탕 위에서 국민연금을 개편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선조들도 힘들게 살아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희생을 했잖아요. 우리도 우리 세대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해서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고 연금도 가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폭탄 돌리기 식으로 미래는 모르겠다, 지금 당장 현금으로 주면서 복지 포퓰리즘으로 가겠다, 인기만 얻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나 이 시대의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워요. 장관님도 양심이 있다면 솔직히 국민들한테 이게 어렵다,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 세대가 자식들, 손자 세대에 부담 안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개편안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국민연금 보험료 안 올리고 이렇게 소득대체율을 높이게 되면 기금고갈돼 버립니다. 연금고갈돼 버립니다. 그러면 미래세대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좀 솔직해지셔야 되지요. 정말 울분이 터져요, 울분이 터져.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좀 해 주십시오.

물론 장관님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지요.

그런데 개편안 올리면 청와대에서 비토 내려오고 어떻게든지 설계를 잘 해라, 설계를 잘 하라는데 설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대통령님한테 설계 좀 잘 해 가지고 발표하시라고 그러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책임 부서 장관으로서 좀 솔직해지시고, 토론해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위원님 말씀 제가 깊이 새깁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도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깊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김승희 위원님께서도 왜 네 가지 안을 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토론이 끝나갈 때쯤이면 저는 자연스럽게 왜 네 가지 안이 나왔는지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 보면 현행을 유지하는 안이 5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많은 국민들은 2안을 또 강력히 지지합니다.

그런데 그 안들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개혁 방향과 비교했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한 50%가 원하는 현행 유지를 담지 않고 개혁안을 냈을 때 무턱대고 반대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이 어떤 의미가 있고 다른 개혁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개혁안에 네 가지 안을 담는 그 자체는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유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성일종 위원님 환영합니다. 계속 복지위에 남아 계십시오.

이번이 4차 재정추계였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동안에도 재정추계는 쪽 이루어진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져 왔습니다.

○기동민 위원 4차 재정추계에 근거해서 기금고갈 시기가 당겨지니까 재정건전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되어서 보험료율도 좀 손봐야 되는 것 아니냐, 소득대체율도 손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네 가지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를 했고 그 네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책임 있게 진행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 논의가 보통 5월이나 6월 정도면 끝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일차적으로는 4월에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4월 말 정도면 1차 논의가 마무리가 되어서 좀 더 명료한 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토론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장관님, 이게 무책임한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말씀드리기 힘들다 마는 저희들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재정추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그전에도 재정건전성이 좋았던 것은 아닌 거지요. 끊임없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재정건전성 문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이고, 지난 이명박 정부·박근혜정부 10년 동안에도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논의가 되었던 것인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기동민 위원 그것이 무책임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무책임하게 지내시다가 갑자기 왜 책임의 문제를 지금 말씀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전에 없던 문제가 지금 당장 생겨 가지고 무책임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계속 누적되어 왔던 문제를 10년 동안 폭탄을 돌리고 나서 이제 ‘왜 너희들은 개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대단히 무책임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저는 돌려드리고 싶은데, 장관님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는 앞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기동민 위원** 후하게 평가해 주시네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 꼭 개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기동민 위원** 책임 있게 논의해야 됩니다. 이전 정부처럼 요란한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고 ‘공무원연금 개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문제고요. 국민연금 이번에 책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기동민 위원** 그런데 전제는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라는 대원칙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아니면 소득대체율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것 하지 않는 이상 하늘 아래 새로운 뾰족한 해법은 없습니다. 마술을 부릴 수가 없는 거라고요. 국민들에게 ‘조금만 내십시오.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제도 초기에는 유인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홍보하고 제도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해 뒀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런데 국민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이성적으로는 뭔가 새로운 판단들이 필요하다,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시지만 현실 속에서는 좀 더 토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픈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저는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함께 가야 돼요. 사회적 합의, 국민적 동의 이런 부분들이 제1의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과 관련되어서 제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국민연금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국민연금을 국민연금답게 운영을 해야 돼요. 국민연금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땅콩 회항, 물컵 갑질 그리고 공사장에서 폭력 쓰고, 이런 오너 리스크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주주 가치를 훼손했지요. 당연히 국민연금이 수탁자 원칙에 의

해서 개입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거예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연금자본주의의 한 일환으로 주주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부 다 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얼마 전에 원칙과 방향을 말씀 주셨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인 차원의, 상징적인 차원에서 국민연금이 책임 있게 기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지만 2월 초에 전문가 위원회, 수탁자 위원회를 통해서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좀 알아보겠다, 그리고 실제 대한항공이라든지 한진칼 이런 지배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 하나로 그다음 날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기동민 위원** 칼 같은 경우는 주가가 6% 이상이 뛰었어요. 대한항공도 3.55%가 뛰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칼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대한항공은 횡보하고 있더라고요. 시장이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연금사회주의면, 그리고 경영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경영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시도라면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서부터 책임 있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정말 자기 역할을 하는구나, 내가 국민연금 믿고 맡겨도 되겠구나, 그리고 뭔가 재정적인 개혁들을 이루어 낼 때가 됐다, 이런 정도의 신뢰를 확보하지 않으면 저는 개혁은 요원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칼과 대한항공 문제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주주권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국민연금의 신뢰도가 완전히 증폭될 수도 있고 ‘너희들 하는 게 그렇지’ 이렇게 후퇴해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상징적인 조치예요. 여기에 대해 책임 있게 임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과정들을 한번 말씀을 귀보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개별 기업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또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제고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제 작동함에 있어서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행을

할 것이고, 그것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 수익성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부당히 사기업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고요. 단지 하나의 목적은 기금운용의 장기적인 수익성 제고, 그 원칙하에서 철저히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동민 위원 모든 기업에 대해서 다 개입하고 모든 기업에 대해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주주권을 행사하고 이럴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시장가치 그리고 주주가치가 심대하게 훼손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에서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장도 환영하고 있고 주주들도 박수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회복해 나가고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서 국민연금에 대한 차별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 과정들을 거쳐 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기동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기동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태안·서산 출신 성일종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화면에서 잠깐 보셨지만 보험료의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대통령의 공약, 아까 공약이 아니고 토론이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성일종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약입니다, 공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공약집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공약집에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

○성일종 위원 공약입니다. 대선 복지 공약입니

다. 여기 드릴까요? 이것 만약에 아니면 공약이라는 것…… 여기 ‘소득대체율 50%까지 올리겠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대통령 보좌하러 나오셨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에서 나온 공약집을 찾아봤습니다.

○성일종 위원 대통령 캠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들어가셨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성일종 위원 가서서 공약 만드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성일종 위원 대통령께서 발표하셨습니다. 후보들 다 있잖아요. 여기 50% 공약을 했어요, 소득대체율 50%로 올리겠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것은 혹시 보도가 아닌가요?

○성일종 위원 보도가 아니라 발표한 겁니다, 발표. 지금 장관님, 이것도 모르고 장관 하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는 공약집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일종 위원 그 공약 누가 만들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대선 캠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 캠프에서 누가 만들었어요? 장관님이 관여하신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물론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적으로 나온 공약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일종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관께서 장관으로 오셨어요.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상당 부분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약집에는 없습니다.

○성일종 위원 공약집에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없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공약집 찾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 발표가 됐는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찾아본 공약집은 다 봤지만 없었습니다.

○성일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러면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시정이 아니라 책임져야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성일종 위원 어떻게 시정 가지고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공약한 것도 지금 장관이 몰랐다고 한다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것 공약으로 나온 겁니다, 장관님. 그리고 대통령께서 발표하면 그게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토론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러면 토론회에서 실수했다고 할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아닙니다. 그렇지는……

○성일종 위원 그렇잖아요. 유승민 후보가 물어 보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말이지요. 이것 발표도 했어요.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을 개편하는데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 더 걷는 방안, 그렇지요? 개혁의 방향을 보면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아니면 더 걷는 방안. 세 번째, 정부의 공적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투하되는 방안, 아니면 기금운용을 잘 해서 수익률을 올리는 것 말고 또 다른 대안이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러니까 대안이라는 것은, 목표점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일종 위원 지금 네 가지 안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보험료를 더 걷는 방안 또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더 걷는 방안, 아니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 대안들의 목표점이 재정안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일종 위원 물론입니다.

또 부족하면 제3의 자원을 더 투하하는 방안, 기금운용수익률을 아주 높여 주는 방안 이외에 재정안정적 측면에서 다른 대안이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고 가서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우리가 88년도부터 들여와 가지고 소득대체율 70%부터 시작을 했어요.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사실은 80%부터 시작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보험료를 3%부터 시작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9%인데 단계적으로 3%부터 시작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3%에서 9%까지 올라갔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성일종 위원 장관님 말씀대로 80%부터 소득대체율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얼마 와 있어요? 45% 와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올해 현재는 약 45% 선입니다.

○성일종 위원 이 방향이 말이지요, 소득대체율은 계속 낮아졌어요. 보험료를 계속 올라갔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무슨 수로, 장관이 무슨 수로 소득대체율을 올리면서 보험료 인상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일종 위원 공무원연금 우리가 개혁했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성일종 위원 공무원연금 개혁한 것, 내용 좀 한번 해 보시지요,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보험료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수급률을 낮췄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률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물가상승률은……

○성일종 위원 5년간 동결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기존 지급자에 대해서는 동결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정년을 몇 세에서 몇 세까지 늘렸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55세에서 65세로 늘렸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대안 있습니까? 왜 솔직하지 못하십니까? 지금 국민연금 개혁하는데 이것 말고 다른 방법 있습니까? 핵심의 본질로 가자고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두 가지 정책적인 수단은 더 있지요. 대안이라기보다 수단은 공적인 기능을 더 넣는 것과……

○성일종 위원 아니 장관님,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가는 게 지금 제일 목표잖아요. 그런데 이것

말고 더 있어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보험료율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12.24%인가요? 제가……

○**성일종 위원** 틀리실 수 있습니다. 13%에 소득대체율이 38.7%예요.

일본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일본의 후생기금 말씀이신가요?

○**성일종 위원** 일본이 17.8%에 33% 소득대체율이에요. 독일이 자기 급여의 18.7%를 내면서 42%예요. 영국이 25%를 걷어 가면서 36%의 소득대체율이에요. 대한민국 지금 9% 보험료를 내면서 45%예요. 이것 외국하고 비교해도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여당 위원님들 얘기하시던데, 과거 정부에서도 이것 분명히 개혁을 했어야 돼요. 못 했기 때문에 정권 뺏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권에 와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장관께서 내놓으신 이 네안 좀 봐 보세요. 이것을 안이라고 가져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 협박용이지 이게. 여기 어디에도 소득대체율 내린다거나 보험료를 올린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3·4안은 뭐냐 하면 더 걷어서 더 주겠다는 거예요. 미래세대에 더 부담이 있어요. 이게 무슨 개혁안입니까?

장관님, 이것 우리가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봐야 돼요. 외국 어떻게 하는지, 이 나라가 우리보다 국민연금 역사가 짧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훨씬 길지요.

○**성일종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몰라서 그렇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의 공약을 흉내 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장관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은 대통령의 공약을 우리가 지켰다라고 그저 흉내 내거나 포퓰리즘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고해성사를 하고 국민한테 이해를 구해야 돼요.

2차 질의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 질문이 끝나셔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기금 안정에 필요한 보험료를

이 예컨대 18%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 18%에 언제 도달하느냐 하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어차피 18%를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결국 단계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담겨 있는 안은 향후 5년 내지 10년간의 보험료를 인상해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국적으로 연금기금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이번에 만약에 3안·4안대로 갈 경우에는 현재 기금고갈 연도인 57년도를 62년, 63년으로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금 재정안정을 포기한다거나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지요.

우리가 향후 사오십 년에 걸쳐서 도달해야 될 보험료율이 18%라 했을 때 지금 18%를 제시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는.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고 또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안을 담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요. 그런데 그런 안을 두고 무책임하다고 표현하시거나 또는 무지하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조금 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 수용성이 가능하고 우리가 어차피 높은 보험료율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5년, 10년 뒤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비교적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장관님, 재정의 건전성 문제는 전혀 고려가 안 됐어요. 아까 다음 세대를 고려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음 세대를 고려하신다고 한다면 더 걷어서 더 주는 것은 다음 세대에 더 큰 부담이 가는 겁니다. 착시현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게도 보실 수 있지만……

○**성일종 위원** 지금 더 걷고 소득대체율을 내리든 동결하든 이런 방향으로 가야 정말로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지, 더 걷어서 더 주는 게 다음 세대에 가면 더 헉헉덜 텐데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도 대략 추계를 해 보면 소득대체율 5%p 높이면 거기에 상응하

는 중립적인 재정은 한 2%p의 보험료를 올리는 겁니다. 만약 3안대로 되어서 우리가 비록 10년에 걸쳐서 올리지만 3%p를 올리게 되면 2%p를 중립적으로 가고 1%p는 재정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 안까지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2차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성일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위원장님, 성일종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될지, 양해해 주신다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정부 측에 시간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새로운 질문을 유도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보험료 인상이 없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또 지난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을 공약을 했느냐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찾아봤는데요. 대선 당시의 대선공약집, 더불어민주당의 ‘나라를 나라답게’라고 하는 공약집에 의하면 162쪽에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새 정부 출범 후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만들었던 국정 5개년 계획에 의하면 75쪽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한다는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고 하는 내용은 공약사항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지금 그 공약을 했느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을 벌이면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사장님의 답변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것도 이사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장관께서 하실 일이지. 왜 끼어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찾아 가지고 장관한테 넘기셔야지.

○위원장 이명수 그것은 그만하시고요, 앞으로 계속 질의 시간과 후속 추가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그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TV 토론에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약집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 정리해서 발표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고 재정추계 연계와 관련해서 대체율을 높이도록 한다고 하는 방향성을 얘기를 했고요.

제가 다른 후보들의 공약을 보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연금 관련한, 지금 우리 국민연금 관련해서 아예 공약이 없어요. 그리고 단지 기초연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아마 현행대로 가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김승희 위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예 공약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공약이 없고,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80만 원을 하겠다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꾸 공약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번 확인 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야당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 지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내고 덜 받게 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고 차후에 우리 후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왜 거꾸로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고 얘기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국민연금 관련해서 국민들 앞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폭탄 돌리기다, 그리고 고해성사해야 된다고 성일종 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해 주셨어요. 저는 그동안 특히 정권을

잡았던 정치세력들,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지금 자유한국당이겠지요. 정말 고해성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1988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30년 전인데, 그 당시에 보면 소득대체율이 70%였어요. 보험료를 3%의 제도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보면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렇지요? 그 당시에 아무리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3% 내고 소득대체율 70%의 제도라고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고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도 도입 이후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금개혁이 이슈가 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으로 낮추고 그때 보험료를 9%로 높이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향후 주기적으로 재정안정성 점검을 위해 재정재계산 제도를 도입해서 5년마다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습니 다.

그래서 1차 재계산이 발표된 참여정부 시절 60%인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추고 기초연금을 도입해서 노후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개혁을 해 낸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정말 어려운 개혁을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 낸 것입니다.

그 이후 2·3차 재계산이 있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전혀 아무것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연금개혁을 위한 시간만 질질 끌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정부와 더불어서 국회가 철저한 반성 그리고 정말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입장을 발표한 것입니다. 밝혔는데, 문제는 지금 고령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연금수급 세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오히려 보험료 부담 세대는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동으로 함께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방 치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다시피 방안 이 뭐가 있습니까? 더 내고 덜 받는 안, 지금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더 내고 현행 유지, 더 내고 덜 받는 안—이것은 지금 없습니다—그리고 더 내고 더 받든지,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상희 위원 기초연금을 줘서 노후소득을 보장하든지 이런 방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가 국가 재정부담을 높이는 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가 재정부담과 관련해서 정부가 이것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원칙은 천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군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 부담이 2018년도, 지난해지요, 1조 4600억을 부담하였습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은 2조 2800억을 부담했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지만 지금 다른 나라들도 다 국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처음 애초의 설계가 엉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혁안에는 국가 부담에 대한 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장관께서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도 운용재원의 2분의 1을 국고로 보조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선언적 규정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가지급 명문화를 하면서 국가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행대로 하든지 아니면 더 내고 덜 받든지, 더 내고 더 받든지 국민들이 결단해라 이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책임과 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국가가 부담해야겠다고 하는 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국민연금 하나만 놓고 국가의 부담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지금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서 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가 한 1조 5000억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일부를.

그리고 노후소득보장체계라는 좀 더 넓은 체계에서 보면 기초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의 경우 기초연금 10조를 합치면 대략 11조 5000억 정도를 노후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많은 포션(portion)을, 보다 많은 비중을 기초연금에다가 또는 국민연금에다가 국가가 더 기여하는 형태로 바꿀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도 무책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일정 부분 부담하고 있고, 저희들이 제시했던 공통된 안이라고 하는 각종 출산크레딧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납부예외자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을 해 주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투자를 하겠다는 뜻인데, 물론 나중 지급단계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지급하겠다는 것을 정부가 부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규정하기에는 너무 빠른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

○**위원장 이명수**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이 질의를 해 나가면서 참 압당한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후보 공약집에 없었다고, TV 토론회에 나와 대통령후보자로서 온 국민에게 공약을 한 50%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단지 문자화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지금 부정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국민적인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순례 위원** 작년 12월에 저희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위원들 일동이 정론관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국민에게 폭탄 돌리기다.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날 제가 국회에 있었습니다.

○**김순례 위원** 성명서에는 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는 것도 기억이 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순례 위원** 제1야당으로서 왜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개입 이후에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판단과 설계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장관님께서 사회복지 쪽도 하였고 여러 가지 학자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것을 학자적인 양심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를 인상이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부분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지요?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에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를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논의하셨잖아요, 그 시점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나온 것은 자문위원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순례 위원** 자문위원안과 더불어서 어쨌든 논의되고 있는 실체가 이쪽으로 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8년 11월 7일 대통령의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수정·보완하라’ 이런 단 한마디에 의해서, 대통령이 개입된 겁니다. 이게 노후보장과 재정안정성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점처럼 표현이 되고 다뤄졌다는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개입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말씀 이후에 변화가 모색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는 중간보고 이후에 큰 내용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례 위원** 안 바뀌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중간보고 드릴 때도 이미 이와 거의 유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순례 위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하고 개편안에 있어서 재정안정성 문제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개편안 어디에도 2057년부터 2063년 이후 적립기금 소진에 대한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있습니까, 소진에 대한 대안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순례 위원** 기본 요율에 대한 어떤 부분이 되지 않고는 이게 되지 않는데……

이걸 대안 토론회에 참여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김용하 교수도 ‘정부 개편안에 적립기금 소진에 대해서는 전혀 대안이 없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가 이렇게 춤을 추는, 이런 것들이 주제가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국민연금법 4조에서도, 장기재정균형 유지에 따른 개편안이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복지부가 청와대·여당 눈치를 보면서 끼워 맞추기식의 이런 연금에 대한 후속조치를 했고 이런 것은 행정부가 국민을 속인 기만행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 진짜 정부부처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번에 내놓고 있는 네 가지 개편안을 보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안·2안 이것은 손도 안 대는 개편인가 이런 국민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고요. 3안·4안에 있어서는 보험료를 올리지도 않고 연금을 더 받자는 그런 내용인데, 국민들이 보험료를 더 낸다 이런 부분에서 재정 안정성에는 효과가 있을까,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표준수치를 지금 3안·4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대충 만들어서 끼워 맞추고 결국 정치권에 넘기는, 국회로 떠넘기는 어떤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자, 박능후 장관께서 2018년도 신년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관께서는 재정건전성 평가를 하고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왜 노후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심히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김성주 이사장께서도 작년 신년사에서, 마찬가지로입니다, 재정계산 대응 TF를 구성해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김순례 위원** 그런데 올해 신년사에서는 기금 소진 공포 운운하면서 개혁 과정이 연금제도를 불신하게 만들었다는, 약간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만을 늘어 놓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제가 직

접 국민을 대리해서, 대의정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묻고 싶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음에 오늘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이 끼어들어서, 개입을 해서 노후보장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닌가 그리고 장관과 연금공단 이사장께서도 했던 말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뒤엎어진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두 분이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이끌어 가는 책임자로서, 또 이것을 관할하고 있는 정부부처의 장관으로서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것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엇그제 정부의 역할을 떠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정부부처에서 일하는, 국민의 소명을 받들어서 하는 행정직의 공무원들은 인기가 없는 정책을 펼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떠났습니다.

국민들이 장관님과 행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정직과 소명의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순례 위원** 정치적인 양심, 정부부처에 정직·도덕의식의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제대로 담길 수 있는 수정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양심의 가치를 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적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박능후 장관님과 이사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 신년사와 이 내용의 태도가 바뀐 것에 대해서 두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년사라는 것은 매년 쓰는 거니까 조금씩 내용이 발전되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순례 위원** 이게 발전입니까, 퇴보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리고 노후보장의 차원에서 국민연금제도를 위시한……

○**김순례 위원** 참 억지를 하고 계시네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나머지 제도들을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는 주장은 제 주장이었습니다.

○**김순례 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작위적인 해석에 능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국민의 눈이 바로 보고 있습니다. 똑바로 얘기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김순례 위원님, 제가 성함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제도 개편을 노후소득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주장은 제 주장이었구요. 그 주장을 제가 관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 위원** 말씀해 보세요, 김성주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18년 신년사, 19년 신년사를 비교해 주셨는데요. 저희 국민연금 공단이 재정추계 과정에서 하는 역할은, 저희 연구원들이 3개 분과에 간사로 참여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공급해 주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데요. 당연히 저희 공단에서도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정계산 TF를 구성해서 제도개선 방안이 지속가능성을 갖도록 만들고 기금운용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토록 한다라고 하는 그 역할도 충실히 했구요.

올해는 정부의 개혁안이 발표가 된 상태에서 여전히 국민들이 이 제도개혁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불안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는 기금소진에 대한 불안에서 좀 벗어나서 노후소득보장이라고 하는 본질에 충실한 그런 역할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순례 위원** 아니, 대통령이 개입하기 전에는 국민들의 의식 반영을, 꿰뚫지 못하고 있었다는 반증의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제가 오후에 2차 질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수** 김순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 위원** 안산시 단원구갑의 김명연 위원입니다.

장관님, 정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여러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김명연 위원** 집행에 대한 권한을 주고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르는 겁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명연 위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정권을 잡은 측에서 결정을 하고 만약의 경우에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될 때는 충분히 국민들에게 배경을 제공해 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러나 지극히 계산적이고 전문성을 필요로 할 때,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동의를 못 구하더라도 설득을 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 위원** 종합운영계획안 이것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습니다.

○**김명연 위원** 저는 대통령께서 현행 유지를 포함한 4개 안을 승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해요. 쇼하는 겁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현하고 대통령이 되신 것 아닙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책임지고 정책을 만들어서 밀고 나가야지요. 어떻게 4개 안을 만들어 놓고 사회적 동의를 구하라..... 이것은 미사여구예요.

그리고 아까 인구정책실장이 이것을 보고하는데 이 안에 우리나라 정책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승인하고 결정했다 하는 내용들은 다 뺐어요. 정치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과잉 충성하는 거예요?

양성일 실장, 국민들은 이 정책이 문제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아니냐 이것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양 실장님이 이 정책 만든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고할 때 이것을 '2018년 12월 24일 국무회의 하고 거기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국민에게 내놓습니다. 그러나 4개 안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지요. 국민들이 지금 사지선다형인지 알고 이것을 지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들이 다 제출이 되어있어요?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양성일** 위원님.....

○**김명연 위원** 왜 그런 것은 빼고 해요? 정치적인 부담이 됩니까?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양성일** 저희 요약본 1쪽.....

○**김명연 위원** 요약본에..... 국민들이 지금 재정건전성, 지속가능성, 대통령의 연금에 대한 결정 철학 이런 것이 궁금하지 출산크레딧카드.....

아니, 연금이 지금 재정이 고갈되는 추계가 나

와 가지고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종합운영계획을 갖고 우리가 지금 국회를 열었는데, 정부의 연금 포폴리즘 정책을 듣자고 지금 실장한테 이 얘기를 듣고 있어요?

할애한 대다수의 내용이,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 중에서 할애한 내용이 우리 국민들한테 이만큼 더 준다, 더 퍼 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출산 크레딧 그다음에 부담되는 가구들 그다음에 유족 연금, 아까 설명을 하는데 전부 그런 것만 늘어놓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주 세밀하게 배경까지 설명을 하고, 더 주겠다는 것은.

지금 더 주겠다는 것 때문에 과거 정권, 지금 정권 문제가 돼 가지고 연금이 이 지경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직업공무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충성을 하고 있어요.

앞으세요.

장관님, 2062년에 3안·4안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고갈 시점이 오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명연 위원 고갈 시점이 온다는 것은 기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물론 5년마다 재정재계산을 하니까……

○김명연 위원 아니, 앞으로 미래의 우리가……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가정하지 말고요. 지금 추계한 내용대로 봤을 때 정부가 내놓은 3안·4안 이것이 선정됐을 때 62년도에 고갈이 되지요? 연금 전문 학자 출신이시니까, 고갈되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정말 너무나 많은 가정을 한꺼번에 하신 것인데요.

○김명연 위원 아니요, 가정이 아니라 지금 재정추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대로 계산을 해야지요. 앞으로 다음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단기적인 5년만 내다보고 그것만 딱 해 놓고, 근시안적인 그런 제도개선만 해 놓고 넘어갈 거예요? 그것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능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묻잖아요. 62년도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것을 요약본이 아닌 원문을 한번 보시면……

○김명연 위원 아니, 요약본에도 적당히 나왔는데 원문 한번 보고 답변하세요.

부과방식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지금의 적립

식으로 가야 돼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림으로 방향은 이미 제시해 놨습니다. 38쪽입니다.

○김명연 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소진되면 연금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물론 그것을 훨씬 이전부터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62년 정도 가게 되면 그때는 부과방식에 가까운 그런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연 위원 가까운 것은 또 뭐고 부과방식은 뭐예요? 부과방식이면 부과방식이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러니까……

○김명연 위원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냥 전문가답게 부과방식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러니까 왜 저렇게…… 위원님, 애매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완전한 타입으로서의 부과방식과 완전한 타입으로서의 적립방식 이것 두 가지 있는데 그中间的 어느 한 지점이면 어느 쪽에 더 가깝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부과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김명연 위원 국민들이 보험을 드는데 국가에서 하는 연금을 들까, 아니면 내가 사보험을 들까…… 지금 불안해서 사보험 드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소진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지금처럼 국민들이 그냥 정부 믿고 계속 연금에다가 돈을 내겠어요?

그리고 부과방식으로 가게 되면 지금 저기 3안·4안의 최대 보험료율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당분간 10년간에 있어서는 12%·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 소진되고 부과방식으로 가게 되면 몇 %예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가게 되면 대략 한 18~25% 사이일 것입니다.

○김명연 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3안은 31.3%, 4안은 33.5%,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추계한 내용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때까지 아무런 제도적인 정비가 없이 그냥 갔을 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명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정부안에서는 이 안밖에 안 내놔었으니까 정부가 내놓은 안 이것대로 저는 지금 계산하는 것인데요. 왜 다음 정부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자꾸 가정을 해서 피해 나가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 안대로 되면 3안은 31.3%, 4안은 33.5% 이렇게 오르지요? 이것 이렇게 내면서 부과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어떤 국민이 내 소득의 33.5%를 내고 앞으로 내가 받을지 모르는데…… 지금 나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내 소득의 33.5%의 보험료를 부과방식으로 내고, 저 윗세대들이 내는 그런 보험을 누가 들겠어요? 차라리 이 보험을 안 들고 다른 사보험을 들든지 아니면…… 직장가입자들은 의무적으로 되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장가입자는 드는데 기업들이 거기에 50%를 내주고 기업이 버터 내겠어요?

그리고 임의가입자들, 경제활동 하기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이 33.5%까지 보험료를 내고…… 지금 내가 내서 다음 달에 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는데 나중에 67세나 65세에 받을 돈을 부과방식으로 내겠느냐고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지요.

○**김명연 위원** 이런 것들은 왜 설명을 안 해요? 이게 공포 마케팅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금제도가 오래된, 100년 이상 된 국가도 30%의 연금보험료율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고 제도를 병행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4%라든지 33%라는 것은 이 상태가 유지된다는 근거를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비현실적인 가정입니다.

○**김명연 위원** 그래서 독일이나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18.5~18.7% 이 정도에서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습니다.

○**김명연 위원** 그래서 그 나라는 정치적으로 합의가 잘 되고 도덕적 양심에 의해서 연금을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도가 바람직하고 지속 가능하게 개선이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18.5~18.7%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그런 철학도 없이 결정 권한을 국민이 줬는데도, 정치하라고 행정하라고 줬

는데도 그것을 못 하고 사지선다형을 만들어서 ‘이것을 국민들이 제일 많이 원합니다’ 하고 현행 유지를 1번에 놓고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짧게만 답변을 드리면……

○**김명연 위원** 말씀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앞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제가 말씀드렸습시다라는 1안을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가치라든지 의미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위상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1안을 담은 것입니다.

○**김명연 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것은 쇼예요. 개편안이라는 것은 지금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고치겠다는 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갖고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느 국민이 더 내는 것에 동의하겠어요, 늦게 주는 것에 동의하겠어요, 덜 주는 것에 동의하겠어요? 당연히 지금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제일 관심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유지하면 안 되니까 이 난리가 난 것 아니에요? 안 되는 안을 왜 올려놓고, 국민들이 여기에 제일 관심을 갖는다고,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래서 1번에다가 이것을 딱 놓고……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추계해서 개편안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동의를 구하는 것인데 어차피 바꿀 것을 왜 여기다 올려놓았느냐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만약에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안이 담겨 있음으로 해서 그 안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을 채택하기 힘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연 위원** 장관님, 앞으로 모든 제도를 1·2·3·4번 해 놓고 국민들께 ‘사지선다형 중 택일하십시오’ 이렇게 정책 만들어서 하나하나 다 나가실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연 위원** 주무장관이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하나의 안을, 최적안을 내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현이 가능할 경우에. 그런데 하나의 안을 냈을 때 그 안은 반드시 장점이 많다 하더라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에 모든 비판이 집중되어 버리면 정작 그 안은 추진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명연 위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마무리 짓고 2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기관이 됐어요. 이것은요 연구용역을 줬을 때 1·2·3·4안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정부에 보고하면 정부가 선택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부지 정부가 연구기관처럼, 용역기관처럼 4개 안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한테 이것을 결정하라고 이렇게 내던 집니까? 이렇게 무능한 정권이 어디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러나 진짜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명수** 추가질의하고 장관님 답변은 이따 하시지요.

김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찬 전에는 윤소하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잘해 내십시오, 국민들을 위해서.

장관님, 국민연금 개혁은 노후보장성과 함께 세대 간, 소득계층 간 형평성 문제 그리고 재정 안정화 방안 이 세 가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단순한 여론조사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복지부가 제시한 이 네 가지 안은 이런 복잡한 사안에서 해결 방안이라고 보기에선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정확한 사실의 직시다, 이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같은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논의하는데 누구는 연금 재정에 문제가 없다 하고 누구는 연금고갈이 걱정된다고 하면 어떻게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연금 문제에서만큼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최저노후생활 보장 목표를 설정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공적연

금이 지향하는 바를 분명하게 제시한 점은 일단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행 유지안 외에 2·3·4안의 경우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이렇게 더하면 100만 원 수준, 최소한 90만 원 이상의 보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윤소하 위원** 장관님, 여기의 이 100만 원 수준은 250만 원 평균소득자가 25년 가입했을 경우 이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습니다.

○**윤소하 위원** 최저노후소득을 보장한다고 했으면 말 그대로 모든 노인의 최저소득을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저 보장 개념을 사용하면서 평균소득자 연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모두에게 최저임금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금액은 평균임금을 홍보하는 격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이것이 국민을 혼란케 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저 가입자들의 경우는 힘듭니다. 그러나 나머지 기초연금이라든지 다른 것과 같이 결합을 하고 마지막 수단은 기초생활보장제도까지 합치면 100만 원은 저는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소하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최소생활비 95만 원에 못 미치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아니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것은 아닙니다.

○**윤소하 위원** 복지부 설명대로라면 지금 현재 정한 최저노후소득보장이 안 된다…… 평균소득자 이상에 해당하는 게 어떻게 최저 기준이 됩니까?

다음 질의는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질급여액인데요. 기초연금 30만 원의 경우 월 100만 원 소득자는 현재 기준으로 월 73만 8000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도 실질급여액은 저기 보시면 75만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에 최고소득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89만 9000원에서 112만 2000원, 22만 3000원이나 오릅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윤소하 위원** 아니, 소득대체율만 높여서는 저소득층 혜택이 없습니다.

다음 표요.

기초연금으로 40만 원 올렸어요. 그러면 100만 원 소득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45%로 하면 89만 2000원, 50%면 94만 7000원을 받아요. 고소득자는 연계감액제도 때문에 그만큼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자, 기초연금을 50만 원 올립시다. 그러면 소득 대체율이 45%만 되어도 대부분의 가입자가 최저 소득 보장 기준에 이른다…… 여기에 물론 가입 기간까지 결합해서 검토해야 합니다만 워낙 이게 복잡해 가지고요 소득별로만 일단 살펴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초연금 인상이 병행되어야 저소득층의 최저소득 보장이 가능하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공적연금을 통해서 최저소득 보장을 하려고 한다면 이처럼 소득계층별, 가입기간별로 비교해서 가장 공평한 안을 찾아야 합니다. 복지부가 제시한 것처럼 평균소득자만 가지고 비교하면 현실과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도 그 점을 충분히 수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이 급여 수준에서 연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기초연금 액수가 많아지면 그 연계가 좀 더 강화되어서 형평을 맞출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윤소하 위원 그래서 저소득층의 연금이 최저 노후소득 기준 이상이 되도록 기초연금을 좀 인상하고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지론입니다. 그리고 재정 어떻게 할 것이냐, 필요하다면 보험료 인상해야겠지요.

자, 다음 질의요.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릴 경우 미래 재정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출 규모 한번 보시겠습니다. 2057년 경우 GDP 대비 지출 비율이 30만 원은 2.6%, 40만 원은 3.4%입니다. 2070년에 가면 각각 3.1%, 4.2%입니다. 약 1%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 사회가 이 정도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대개 선진국의 경우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한 10~12% 정도가 지출됩니다. 그런데 그것의 배분방식이 보험방식이라

는 국민연금에 더 치중할 것인지 아니면 부조방식이나 공공부조의 형태인 기초연금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부담이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것은 국민연금과 어떻게 연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윤소하 위원 미래 재정은 뭘까요? 미래를 기준으로 봐야겠지요? 그래서 저는 걱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라면 GDP의 한 3~4%는 지출이 가능한 범위다, 제가 본 바로는. 기초연금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병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알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적어도 현세대하고 지금 60대 이상 세대들이 노인으로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기초연금의 비중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국민연금의 가입 연도가 짧아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보장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더 많이 지나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많아지고 국민연금이 좀 더 충실해지면 그때는 또 기초연금의 비중을 줄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한 20~30년간은 기초연금의 비중을 점차 늘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소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윤소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 위원 서원구의 오제세 위원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그대로, 미세한 조정은 있었지만 현행 유지 방식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차 재정계획을 했지만 1·2·3차와 마찬가지로 4차 재정계획도 거의 변함이 없이 계산을 했고 또 이번에 나온 네 가지 개선 방안도 별다른 개선이 없이 미세하게 현행을 유지하는 그런 기초하에서 했다…… 그리고 보험료를 9%, 소득대체율 40%에 대해서 크게 변화 없이 조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냥 종전대로, 해 오던 대로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 자체를 그대로 유

지하는 한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정권의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가 한 30년이 됐지만 지금도 국민연금제도로 인해서 연금을 받는 분들과 받는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지금 2018년에 지급한 연금액이 23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은 보험료는 43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걷은 돈의 반밖에 지급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또 지금 650조를 쌓아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4~5%의 수익률을 치더라도 그 수익은 30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약 70조의 수익과 연금을 받으면서 20조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50조를 지금 쌓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쌓고 있는 연금이 지금 주고 있는 연금은 그야말로 70조의 수입을 얻어서 20조만 연금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연금의 기능을 지금 잘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국민연금의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도입해서 9만 원부터 해서 지금 25만 원, 30만 원까지…… 연금이 아니라, 다른 나라는 다 연금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연금이 이렇게 작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650조를 쌓아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돈은 그 수익조차도 다 쓰지 않고 50조씩을 지금 쌓아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연금을 50조씩 쌓아 가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과 별도로 10조 이상을 지금 국민연금을 대체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오제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연금제도가 30년이 됐지만 아직도 국민연금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지금 노인들에게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연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예요. 650조가 쌓여 있지만 지금 노인분들은 그 돈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그림의 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그림의 떡이나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재정수지 전망을 보면 2018년

에 50조를 쌓아 가고 있는데, 매년 50조씩 쌓아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2035년 이때까지 매년 50조씩을 국민연금이 쌓아 가고 있습니다. 돈을 줘야 되는데 주지를 않고 쌓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언제까지 쌓아 가느냐, 2041년까지 1700조가 될 때까지 이렇게 쌓아 가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뭐 하는 겁니까? 돈을 쌓아가는 게 국민연금입니까?

그다음에 2041년부터 2057년에 이 돈이 다 고갈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뭐냐, 쌓아 놓은 돈을 쓰는 국민연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57년 이후에는 1년에 걷는 돈은 150조를 걷는데 주는 돈은 450조를 줘야 되니까 300조의 마이너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쌓아 가는 국민연금, 후반기에는 엄청난 적자가 생겨 가지고 지급하지 못하는 국민연금이 바로 지금 현재의 국민연금제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어떤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쌓아 가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쌓아 가지 않는…… 1700조까지, GDP의 50%까지 돈을 쌓아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멍청한 일입니까? GDP의 50%를 쌓아 놓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50조를 불과 15년 만에 다 소진시키고 나면 2050년 소진된 다음에는 1년에 300조, 400조씩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의 이런 국민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시점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실정을 제대로 알려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제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노인인구가 근로인구보다 더 많아지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제도도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현실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될 것인가를 온 국민이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오제세 위원님께서하신 말씀 저희들도 다 충분히 공감하고 또 사

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 순간에 가서 갑자기 부과방식으로 바꿀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장기에 걸쳐서 서서히 준비를 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과방식 대체율이 20% 내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략 그 정도 선까지 우리가 중장기에 걸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가 근로인구보다 많아졌을 때를 대비하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가 필요하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오제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문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최도자 위원 이번에는 연금개혁과 관련한 논란이 유독 많았습니다. 언론에 수차례 개혁안이 노출되고 또 아니라고 부인도 했는데 최종 개혁안에는 정작 필요한 개혁 내용은 다 빠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시되지 않았던 사지선다 개혁안은 정부가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마저 듭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에 재정계산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재정목표로 70년 기간 적립배율 1배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계획서에는 재정목표가 사라졌습니다.

장관님, 국민연금 운영계획에 재정목표가 왜 사라졌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난번 자문위원회에서 70년 뒤에 재정 1년간 적립금을 쌓자고 하는 안이 제시되었고 그게 위원들 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안은 연금기금의 재정안정성을 거두는 데 하나의 좋은 지표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을 경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는 안 중의 하나기 때문

에 이번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최도자 위원 재정목표가 있다면 5년마다 바뀔 환경에서 재정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다음에 점진적인 개혁이 가능한 거지요.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번 정부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장 기금이 많으니까 보험료를 올리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수록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연금개혁 강도는 커지게 됩니다.

연금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목표를 세우고 재정안정화 조치를 만들면 무척 고강도의 재정안정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장관님, 연금 선진국들은 재정목표를 세워서 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는데 우리도 재정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필요합니다.

○최도자 위원 필요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런데 선진국들은 이미 다 부과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정안정만 가져오면 됩니다. 매년 매년에 단기 안정만 가져오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차원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도자 위원 재정목표는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개혁안의 수준을 확인하고 연금개혁에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몫을 평가하는 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습니다.

○최도자 위원 장기적인 경로 설정 없이 무엇을 근거로 재정계획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정부가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그리고 기초연금액을 가지고 네 가지 안을 만들었지만 모두 장기적 재정안정을 포기한 방안이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마저 저항이 심한 보험료 인상을 피하고 숙제를 미래세대로 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되었는데요.

장관님, 청와대는 공적연금 개혁의 정책목표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는데 도대체 이 네 가지 안 중에서 어떤 안에 대해서 무슨 정책목표를 분명히 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고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어떤 부분이 만족스럽다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대체로 만족이라는 말씀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노후소득보장을 국민연금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제도를 동시에 설계하겠다는 그것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셨고요, 그리고 국민들 각계각층의 반응들을 대체로 다 담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정부가 낸 안이 1안을 채택하면 2·3·4안을 버린다거나 3안을 채택하면 1·2·4안을 버린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안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결합해서 좀 더 좋은 안을 조합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복수안을 낸 것 자체는 각각의 특성들을 가장 잘 드러낸 안이기 때문에, 그 안들의 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정책 조합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낸 안들이 수용성 면에서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도자 위원** 그렇다면 정부의 네 가지 안 모두 국민연금법에서 요구하는 장기 재정안정이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을 보면 현행 유지 방안은 2057년에 소진되는 기금 전망의 변화가 없고요. 두 번째 안인 기초연금 강화 방안은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올리면서 보험료도 올리는데 기금 소진은 조금 미뤄지지만 그 이후 지출될 비용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부담을 더 전가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장관님, 국민연금법에서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연금개혁 없이 현재대에 많이 주면 미래세대에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지급보장이 재정을 통해서 적게라도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 약속한 수준의 금액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뒤에서부터 답변을 드리면, 지급보장이라는 것은 그 법이 적용되는 시점에,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급여액을 보장한다는 뜻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여액 자체는 또 법을 개정하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급보장한다고 명시한 시기의 급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가 실제 지급되는 시기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급여 수준을 보장한다는 뜻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

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재정목표가 없는 게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70년 후에 1년간 지급분을 보장하겠다는 것도 하나의 재정목표일 수 있지만, 재정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는 것이 예컨대 30년간은 계속 기금이 안정되게끔 재정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30년의 목표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재계산을 통해서 30년이 보장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은연중에는 기금 안정에 대해서도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도자 위원** 계속해서 2차 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최도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찬 및 휴식과 다음 질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명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인천 서구율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장관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소득대체율 50% 공약을 했는데 파기한 것 아니냐, 그래서 사과하라 이런 말씀 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신동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성주 이사장도 말씀이 있었습니까마는, 제가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공약집을 봤어요. 확인을 해 보니까 퍼센티지는 나와 있지 않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한다’ 그래 놓고 별표를 해 놓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런 과정으로, 지금 사회적 합의의 받는 과정으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TV 토론 당시에 그 언급을 한 적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15년 당시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게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 첫 번째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 두 번째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부분을 갖다가 20%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쓴다, 사실은 이게 합의된 사항이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런데 그 뒤에 그게 전혀 지켜지지 않은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 부분을 발언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기초해서 단일안이 아니고 국민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도출해서 네 가지 안을 제시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신동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개혁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신동근 위원 그러니까 해외 실패 사례를 보니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가 1994년에 집권하자마자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인 의견이 담긴 연금개혁 법안을 제출해서 그때 당시에 노조의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면서 연금개혁안도 수포로 돌아가고 본인도 결국은 사퇴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프랑스 알랭 쥐페 총리의 경우에도 노조와 사회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68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사회적 저항에 부딪혔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신동근 위원 결국 개혁안 수포로 돌아가고 본인이 철회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또 밀어붙였는데 80% 웃돌던 지지율이 38%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 논란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 외에도 프로디 전 이탈리아 총리,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 전부 다 실패하고 결국 본인이 사퇴하거나 정권 재창출도 못 하고 그냥 그런 부담만 안기고 결과적으로는…… 정권을 재창출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둘째 문제이고 연금개혁안 자체가 성사가 안 된 거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거기에 비해서……

그러면 이런 실패한 공통점이 뭐니까? 결과적으로는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시간을 갖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실패한 거지요.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신동근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해외의 연금개혁 성공 사례를 제가 살펴보니 스웨덴은 1985년부터 1998년까지 장장 14년에 걸쳐서 여·야·정 모든 사회정파가 다 모여서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신동근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에 상응하는 연금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영국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10년부터 13년까지 4년 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면 성공한 나라들은 기간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오랜 시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쳤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신동근 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단일안을 낸 게 아니고 열일곱 번에 걸친 시도별 대국민 토론회, 대상별 간담회, 온라인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네 가지 안을 낸 것 아니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신동근 위원** 만약에 정부가 한 가지 안만 냈으면 그걸 가지고 지금 찬반 논쟁 벌어지고 아마 사회적인 혼란만 야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해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신동근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금고갈론하고 후세대 부담론을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신동근 위원** 그런데 보면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제도 도입은 도입 이후에는 보편적인, 연금가입자들이 전부 은퇴할 무렵까지는 사실 이렇게 쌓이잖아요, 숙성 기간을 거치고. 그렇지요? 그때까지는 당연히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지요. 그리고 성숙 단계를 전후해서는 이 기금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할 것인지 그리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게 또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기금고갈론이나 후세대 부담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연금제도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마치 본인이 내서 본인이 타는 적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걸 기본적으로…… 그런 주장에 의하자면 현세대가 받는 급여는 현세대가 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건 세대 간의 부양을 본질로 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런 본질적 차이가 있는 거지요.

김성주 이사장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후세대에 부담을 준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우리가 5년마다 재정추계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신동근 위원** 물론 지난 보수정권 자유한국당 10년 동안 재정추계만 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재정추계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려고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해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신동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안을 가지고 ‘국가재정

으로 불가능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OECD가 낸 ‘한눈에 보는 연금제도’ 2060년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율을 보니까 OECD 평균이 GDP 대비 10.9%, 그리고 유럽연합이 GDP 대비 11.2%, 우리나라의 경우가 40만 원을 가정하더라도 합산이 11.3%예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GDP 대비 11.3%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신동근 위원** 그런데 이걸 마치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포퓰리즘이 아니고 현실 가능한 리얼리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신동근 위원**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시는 그 정당에서는 그 정당의 안이 무엇인지 대안을 제출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이렇게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을 제출하시든지, 그게 아니고 비판만 일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야당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성숙한, 서로 간에 생산적인 논의와 또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신동근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더 유념하고자 하는 것은, 연금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선진국이 걸어온 길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한 조건하에서 지금 제도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우리처럼 오랜 기간 적립금이 쌓여 있었던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매번 다 급해서 연금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큰 후폭풍에 휘말렸었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적어도 한 삼십 년간의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 나가면 어느 정권의 성격을 떠나서 국민 전체나 또 국민경제 차원에서 보더라도

비교적 안정된 차원에서 개혁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지나치게…… 연금개혁을 논의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게 어느 시기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기금고갈 같은 게 마치 몇 년 이내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또 기금고갈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인 시각을 두고 보되 그러나 단계적으로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얼마든지 안정된 연금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신동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이번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어떤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현세대 노후빈곤의 문제 그리고 미래세대의 노후보장과 관련한 정말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정권의 차원을 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지난 정부하에서도 보면 그당시에 보건복지부가 여러 가지 이런 재계산을 할 때도 그렇고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를 할 때도 그렇고 지난 10년간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논의가 책임 있게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는 장관님도 아니시고 그냥 전문가로서 장관직을 맡으셨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의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말 소신을 갖고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런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런 점에서 외국의 사례도 보면 결국에 이런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은 사회적 대타협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있을 때만이 개혁이 성공했거든요.

요. 그것은 외국 사례에서 다 드러나는 예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 경사노위에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하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운영 중에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사노위에 가입자단체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1월 28일 날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아마 경사노위에 참여를 하게 되면 거의 20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결정을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희들도 좌우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분들이 참여하도록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하여튼 이번의 연금제도 개혁은 사실 약 10년 만에 논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사노위의 연금특위에서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한 그런 대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공단의 이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보고에 따르면,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부분은 최저노후생활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 최저노후생활 보장이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가 걱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와 그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어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인 정부에서는 1인가구 최소생활비를 100만 원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그렇게 보신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것도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남인순 위원 아마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부분이긴 한데, 지금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서 2019년 신규 가입자들의 주요 소득구간별 월평균 국민연금 지급 예상액을 추정해 봤더니 그

최소생활비인 100만 원 수준에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이걸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남인순 위원 그래서 결국은 명목소득대체율 부분과 실질소득대체율 부분의 격차가 큰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저희가 소득대체율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모형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까 최소생활비 1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우리가 설정해 봤을 때 그러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조금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율을 좀 인상을 하고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이 부분의 조합을 어느 지점에서 합의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네 가지 정책 조합 방안 중에서 이 세 가지를, 국민의 부담도 많이 늘리지 않으면서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조합을 네 가지를 제시하셨지만 장관님의 생각은 어떤 것에 좀 더 많이 기울어져 계신지 알고 싶은데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가 이번에 연금제도 개혁을 논의하면서 노후소득보장체계라는 그런 주제를 내세운 이유도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뭐 연금은 하지 않았지만 기초생활보장연금까지 합쳐서 우리가 결국은 최저 보장은 100만 원 이상 해야겠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소득자 25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우리가 40년 다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평균치면 제일 좋겠지만 보통 한 25년 정도가 평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그래서 25년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대체율은 40%로 하고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하면 아마 월평균 약 100만 원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 저는 이후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소득대체율 45% 선을 유지하고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한다면 실질대체율과 급여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안을 저는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ILO의 공적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보면, 물론 ILO 같은 경우는 30년 가입 기준이긴 합니다만 40~45%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들의 평균 연금 대체율도 2016년 기준으로 40.6%로 파악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하여튼 우리는 가입기간이 좀 적기 때문에, 25년이나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한 45%의 소득대체율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적극…… 왜냐하면 평균 가입기간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제 16일 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스튜어디스 코드 도입을 해서 아마 최초로 적용되어지는 사례,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관한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로 한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경우에, 여러 가지 연금공단에서 소송 제기라든가 중점관리 사안에 대해서 수탁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책임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가 중점관리 대상으로 포함되나요?

조금만, 30초만 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중점관리 사안으로 분류가 되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아작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중점관리 대상…… 저희들이 만든 가이드라인상의 중점관리 대상에는 포함이 됩니다. 대상이 됩니다.

○남인순 위원 그렇게 대상으로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남인순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과 또 정부에서 그동안 한진그룹 대주주들이 사익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는 주주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위원님, 그런데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점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과 주주권 행사를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중점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각적인 경영진과의 대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드러나지 않는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권 행사를 할 때는 그것은 전혀, 특정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할지 말지 자체를 먼저 결정해 줘야 되고, 그리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또 객관적인 자료 위에서 행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남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규 위원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안 마련에 수고해 주신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직원분들에게 우선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관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지금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나 하는 것이 제 첫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IMF에서 권고하는 자동안정장치라는 시스템을 해 가지고 이 논란에서 어느 정도 빠져 갈 수 없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신뢰성 회복인데 이걸 이사장님한테 문의할 건데, 그중에서 지금 꼭 해야 하는 것……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 10년간 현행 상태를 유지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OECD 16개국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보면 일반적인 평균 소득대체율은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수준이. 독일 같은 데도 38.2% 이런 데이터 나오고 일본도 34.6%, 그런데 우리는 39.3%, 어쨌든 간에 이걸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비슷하다는 거고요.

다만 보험료율이 독일 같은 데는 18%, 일본도 거의 18%, 우리는 거의 9%, 그러니까 그걸 보면 나중에 어떤 소득보장의 개념보다는 재정안정성 쪽으로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만 캐나다나 스위스 같은 데는 보면 그쪽에는 보험료율이 우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9%, 거의 7% 정도 수준이면서 오히려 대체율은 스위스 같은 데는 24.2%, 그러니까 한 10% 정도 낮은 정도로……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지금 저같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으로서의 기능은 그렇게 논란의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국민연금이 거의 대표적인 수단처럼 등장하면서 그걸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면서 기초연금이 들어가고 퇴직연금도 들어가고 농지연금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섞여 가면서 이해를 혼란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기초연금은 일단 빼놓고 순수하게 국민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면서, 나머지 우리의 복지체계가 많이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이 노후보장 쪽에도 보완대책이 나오면서 지금 있는 논란에서부터 어느 정도 해결 방법이 쉬워지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김강립 기조실장님하고 양성일 인구정책실장님이 한 10년 전에 이미 연금정책관도 하셨고 국장님도 하셨고 그때에도 이 일을 담당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10년 동안 이 문제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죽 하시다가 왜 정권이 바뀌면서 갑자기 이것이 이렇게 바뀌게 된 특별한 이유가 뭔가를 내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때도 분명히 자금고갈이 굉장히 쟁점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이 논쟁이 시작됐을 텐데 그때는 해결 방법을 뭘 갖고 계셨는지……

왜냐하면 지금 야당에서 계속 묻고 있잖아요. 현재 자금이 다음 세대들한테 굉장히 덤터기가 켜워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데 그 당시에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 방법을…… 그때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더 이상의 대책을, 10년 동안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가를 혹시나 장관님이 대신 하든지 안 그러면 해당 국장님이 대변을 나중에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그다음에 자동안정화장치입니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이 보험료율을 손을 대는 것이 지금 보면 정말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운영하면 될 일을 못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실제보다는 더 중요한 정치적인 사회적 영향 때문에 이러는 건지 그것은 저는 감을 잘 못 잡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선진국에서는 자동조정장치제도를 도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도입했는데, 또 2017년에 IMF는 ‘아시아 연금의 자동조정 메커니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하여 한국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

를 했다면 분명히 보건복지부에서는 알고 계실 건데 이런 제도의 도입을, 지금 혹시 하고 계시는 시스템 중의 하나인지, 아니면 이것을 도입하면 현재의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을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꼭 이렇게 많은 사람 의견을 듣는다 해 가지고 왜 사지선다형으로 바뀌었느냐 이런 논란보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훨씬 설득시키기 쉽지 않느냐는…… 혹시 이 제도를 멈춰 멈춰 멈추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그런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님에게는 다른 것보다는 결국은 자본시장에서 지금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경제력을 왜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느냐 이런 게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이야기는 앞에서 다 이야기했는데 다만 조금은 우리 눈에,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서는 왜…… 다른 한술 사건하고 대우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원론적으로 대처를 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왜냐하면 우리 속인들이 볼 경우에는 미국 같은 데는 엔론사 사건 같은 데 보면 강력하게 응징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엔론사 분식회계는 지금 말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정도의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완전히 파산하고 직원이 25년 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들이 볼 때 관용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용적이 아닌 그런 이유가 있겠지마는 아까 말한 똑같은 큰 회사들, 대체별 회사들 두 사건에서는 원론적으로, 굉장히 원칙적으로 대응했는데 왜 삼성로직스라는 데는 원칙적으로 대응을 안 했나, 마치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사회가 아직도 주저하는 무슨 풍토가 있어서 그런지 하는 의심을 국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사실 여부를 여기에서 좀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분식회계라는 것이, 어쨌든간에 자본시장에서 질서를 바로잡자는 이유겠지요. 그 질서를 바로잡는 수단에 있어서 사실은 국민연금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아까

말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기능에서 왜 최선을 다해 주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마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윤일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이 국민연금을 개혁할 시기인가, 특히 재정에 대해서 재정구조를 바꿀 그런 시기인가를 여쭙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0년간은 그러면 왜 개혁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88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미 우리가 완전적립방식이 아니고 부분적립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을 알고 출발했습니다. 다만 도입 초기에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낮은 보험료율을 했을 뿐이고 또 높은 급여 대체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낮춰 가고 있는데, 지금이 해야 될 시기냐에 대한 답은 가능한 한 빨리 할수록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충격을 덜 주면서 연금제도의 장기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장기적인 재정안정이 예컨대 20% 내외의 보험료율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단기간에 20%까지 올려 가려면 굉장히 무리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50년, 60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서서히 올려 가면 훨씬 충격이 덜하면서 기금제도를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고요.

물론 이번 시기에 안 해도 다음에 뒤로 미루면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한 한 그러지 말고 충격이 덜한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개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꼭 개혁을 하고 싶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스위스 같은 데는 왜 24%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스위스 같은 경우도, 서구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득대체율은 실질소득대체율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가 명목대체율이 45%지만 실질소득대체율은 20%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전 국민 1인 1연금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부부로

치면 한 사람이 24%지만 합치면 48%가 됩니다. 그래서 개별자로 볼 때는 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지만 부부가 돼서 합치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자동안정장치 이것은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부과방식이 되었을 때 그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자동안정화장치입니다. 왜냐하면 부과방식은 나갈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여를 받을 사람이 많아지거나 급여 요건이 늘어났을 때는 그것을 완화시켜서 결국은 급여를 줄 재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억지로 맞추기보다 사전에 장치를, 소위 자동안정화장치라는 것을 설계해서 사회적 마찰이 없는 가운데 자동적으로 조정되게 하는데 가장 큰 단점은 계속 노후소득이 줄어듭니다. 급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노후빈곤을 피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서구의 경우에는 이미 다른 제도적 장치가 많이 설비돼 있어서 굳이 국민연금에 많이 안 들어도 다른 보완적인 장치를 통해서 노후빈곤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해도 큰 무리가 없지만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왜 기초연금을 논의하고 또 자동안정화장치를 논의하지 않느냐 하면 일단 국민연금에서 제외되는 노인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초연금이라는 거라도 써서, 현재의 노후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논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동안정화장치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부과방식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논의하게 되고 그 장치를 도입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윤일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과거 자본시장에서 보여준 소극적인 태도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운영원칙과 철학, 방향들을 새롭게 잡아 나가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작년 7월 31일 날 이루어졌고 ESG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 원칙은 원칙만 천명돼 있지 구체적인 시행지침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런 책임투자 원칙이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진작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작년에 있었던 삼바 사태에 대한 대응도 더 분명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작년 7월에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 1차 감리 결과와 11월의 2차 감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면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윤일규 위원님, 다 마치신 거지요?

○윤일규 위원 예.

○위원장 이명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 그게 지침으로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된 건가요? 다른 법규적인 뒷받침이 필요 없는가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질문을 아까 연금공단 이사장님께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그 스튜어드십 코드를 원칙을 세우고 또 그 규정을 정하고 하는 것은 기금운용위원회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소관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큰 원칙은 다 정해지고 지금은 세부 시행지침을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에는 좀 미흡한 상태지만 대체적인 틀은 다 짜여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안에 또 조금 더 세분화해 들어갔을 때 주주권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짜여져야 되는데 사회적 책임투자 부분은 여전히 아직도 규정을 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가 영국에 도입된 것도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이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단 투자의 윤리성이라든지 관리주체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투자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또 재정투자의 장기수익성을 제고한다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현재로서는 그게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각국이 서서히 다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그렇게 오래되거나 정착된 제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글썄요,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지금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지침으로 해야 될 건지 또 지침으로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어떤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어느 정도로 어떻게 이것을 작동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저것을 명확하게 해 줘서 여기서 정치적인 논란이나 그게 없도록, 정말 필요해서 했구나라는 이런 객관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게 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말씀하신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2차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요.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 장관님, 좀 쳐다봐 주세요, 질의를 하려면 눈을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알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정말 여러 진통 끝에 이번에 개편안을 국회에 던졌는데 사실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걸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적을 하다가 시간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요. 장관님 답변을 보면 제가 더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1안 같은 경우에 그게 개편안이면 개편하는 걸 해야지 현행을 하는 건 개편하지 않겠다는 건데 왜 그걸 집어넣었느냐라고 제가 질의했을 때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장관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실질소득대체율이 증가되고…… 그리고 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승희 위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그리고 실질 소득대체율 증가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편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각지대가 45%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실질소득대체율이 아까 20%보다 더 낮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이건 현행대로, 개편안에도 계속 복지부가 노력해야 되는 공통사항이에요. 그걸 하는 것을 개편이라고 얘기하면서 개편안에 들어가야만 된다고 답변하시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토론회에서 대선후보 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약집에 들어

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게 기재됐느냐 안 기재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을 상대로 그걸 발표를 하셨으면 그 약속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연명 사회수석한테 제가 운영위에서 지적을 했어요. 대통령께서 50% 소득대체율을 대선 때 공약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학자로서 이게 가능하냐 지적을 했더니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이것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거다, 이것 건의할 생각 있느냐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어떻게 다 아십니까? 잘못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잘못된 걸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더 잘 보좌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또 수익률과 관련해 갖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서 너무 답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국민연금에 대한 기금운용 수익률이 얼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글썄요, 잠정치가 아직 발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잠정치지요? 그런데 정말 지금까지 죽 봤을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였고 작년에도 마이너스다, 물론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11월·12월 것은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다, 아직 공시가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희 위원 얼마예요, 1월부터 10월까지? 마이너스예요, 아니예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때는, 10월까지는……

○김승희 위원 대략적으로 -1.5%라고 그렇게…… 물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10월까지 0.5%입니다.

○김승희 위원 -1.5%다라고 나온 것은 잘못된 겁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것은 작년 12월을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김승희 위원 2008년도는 얼마입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2008년도는 -0.18%입니다.

○김승희 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확정된치는 아니고요.

○김승희 위원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은 거예요.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렇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국내외 주식시장의 여건이 별로 좋지 않으니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벤치마크 지수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벤치마크 지수보다 좀 낮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낮게 추정한다는 것은 분명히 운용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기금이사님, 이게 벤치마크 지수보다 낮다는 것은 잘못 운용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전문가시잖아요. 짧게 빨리 말씀해 주세요.

○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 안효준 예.

○김승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서 임명된 지 1년이 넘었어요. 오서 갖고 지금 벤치마크보다 낮다는 것은 분명히 연기금을 잘못 운용한 거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위원님……

○김승희 위원 어떤 핑계로 마이너스 된 것에 대해서 변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벤치마크보다 적습니까, 높습니까? 적지요, 지금? 그러면 적자액이 얼마예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 정도라면 약 10조 정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

○김승희 위원 10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10조는 채권도 다…… 채권은 수익이 플러스였잖아요. 그것까지 다 합쳐서 했을 때 10조인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합쳐서 약 그 정

도……

○김승희 위원 그것을 빼면 10조보다 훨씬 더 손실액이 크다는 거예요. 얼마쯤 돼요? 그것도 모르시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예요, 손실액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한 10조 원 정도 마이너스 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는 정말로 정확한, 그래도 정확에 가까운 수치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현재는 저희가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승희 위원 알아요. 그렇지만 추정한 추정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1월 말이잖아요. 1월 말인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러니까 추정치는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수치를 얘기하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승희 위원 제가 3차 질의 할 거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명수 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 1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장관님, 각료의 역할이 크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성일종 위원 대통령께서 선거로 당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캠페인 기간 동안에 과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게 누구냐? 각료가 해 줘야 돼요. 대통령 대신 욕을 먹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하려니까. 그렇지요? 이 전제조건에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는 ‘대신’이라기보다 ‘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위원 국민연금 개혁안 띄워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민연금을 우리가 88년도에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면서 방향에서 보면 소득대체율이 계속 낮아져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성일종 위원** 보험료가 3%에서부터 9%까지 올랐거든요. 세계의 추세가 다 똑같습니다. 이게 개혁이에요. 이게 그래프로 보면 정상적인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제 말 틀립니까, 장관님?

공무원연금 보세요. 박근혜정부 때 공무원연금 개혁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하기보다 공무원연금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옛날에 기업들이 잘 나갈 때 공무원 봉급이 대기업의 60%, 70%도 안 됐었거든요. ‘연금으로 우리가 해결해 줄게’ 하고 정부가 약속한 거예요. 그걸 하면서 도저히 안 되니까 박근혜정부 때 이 개혁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안 된 것 있습니까? 보험료 낮췄지요, 연령 늘렸지요, 모든 것을 다 해결했거든요. 개혁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 방법이 아니고는 대안이, 실질적인 개혁이 없다는 거예요. 장관님, 이것 동의하십니까? 이것 말고, 이 두 가지의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고 이 개혁 방향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부에서 장관님 오서 가지고 내놓은 안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개혁을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욕먹는 거잖아요. 장관님, 국민연금 하면서 칭찬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사장님, 칭찬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못 들으십니다. 욕먹습니다.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면 이 일 못 해요.

그런데 정부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욕을 안 먹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안이 이거예요, 어찌하면 욕 안 먹을까. 사회적 타협이라는 이야기를 갖다 붙였어요.

세계의 모든 연금의 역사를 제가 봤어요. 프랑스,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 일본, 방향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놓은 대안을 보면 1안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현행이니까. 2안도 기초연금 더 주느냐 안 주느냐, 아까 김승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시더구먼. 여기에 10만 원을 줄 건데 언제 줄 건지 안 줄 건지, 이것은 본질적 문제하고 다른 거예요. 국민 전체적으로 못사는 분들에 대한 보장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일리가 있지만 연금의 개혁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그렇잖아요. 3안과 4안을 보더라도 이 안도 똑같습니다. 보험료를 올리면

서 소득대체를 올리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이거라고 한다면 먼저 공무원연금이나 다른 건 왜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의 핵심은 우리가 과거 역사로부터, 현재 문제로부터 정확하게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개혁하는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외국보다 상황이 좋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외국보다 우리가 훨씬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경제성장동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더 본다고 할 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국민연금이 아까 1.5% 마이너스 났다 그랬나요,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추정치가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렇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이 연금에서 운용하는 수익률이 저만큼 우리처럼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장관님, 개혁에 대한 트렌드와 레코드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로부터 이게 얼마나 많은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 말씀 다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말씀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께서 어떤 큰 트렌드를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제시한 개혁안이 트렌드하고 좀 어긋난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트렌드라는 것이 어느 시기에서 트렌드를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0년대 이후에 세계 각국은 사회보장비 지출을 다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990년대 이후에 정권의 성격에 관계없이 사회보장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적 지출이 적었고 안전망이 그만큼 덜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하향곡선을 그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도, 명목적인 소득대체율이 이대로 놔두면 40%까지 내려갑니다. 실질소득대체율은 20% 수준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노후소득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 제도개혁의 가장 1번으로 잡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제도의 개혁 방향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안정만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고 가장 일차적인 연금제도의 목적은 노후소득보장입니다. 지금 노인빈곤이 46, 47%에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걸 도외시한 상태에서 기금만 장기채정을 안정시킨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대체율을 일정 부분 올리는 것은 이 시기에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3안·4안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무원연금도 소득대체율을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낮춘 겁니다. 국민연금처럼 그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또 연금보험료율은 14%에서 18%로 굉장히 높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혁의 방향은 그때 필요한 것에 따라서 방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이번에 제시된 연금개혁안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하고 어긋난다고 해서 개혁의 방향이 잘못됐다거나 전반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조금 더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위원 좀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1분?

○성일종 위원 장관님이 다 쓰셨어요.

○위원장 이명수 그것 말씀한 것에 대한 추가……

○성일종 위원 아예 3차 질의를 다 써 버릴까요?

○위원장 이명수 지금 하신다 그러면, 3차 질의하실 거면 지금 하세요.

○성일종 위원 예, 지금 3차 질의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그렇게 하시지요, 마무리하시는 걸로.

○윤소하 위원 저 2차 질의 안 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제가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말씀하십시오.

○성일종 위원 장관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연금이라고 하는 하나의 틀하고 또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측면하고는 달리 봐야 합니다. 계정이 다릅니다. 연금은 자기가 낸 걸 가지고 타 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성일종 위원 그리고 여기에 기초연금 같은 경우를 주는 것을 통해서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연금은 운용하는 데 도깨비방망이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틀을 우리가 강구하고 여기에서 해법을 찾아야지 지금 다

른 부분을 갖다가 함께 보시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공적자금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성일종 위원 또 아니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 올려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부수적인 또 다른 정책수단이 있으면 모를까 연금은 연금으로서의 개혁을 충실히 해야…… 본질의 문제를 확실하게 가야 합니다. 지금 외국도 똑같이 그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더 확대해서 보고 계세요. 물론 그 방향이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에 대해서 정확한 스테이터스(status)를 가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 사회적 틀을 갖다가 고민하고 붙일 것인지 넣을 것인지, 공적자금을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욕을 안 먹기 위한 임시적 개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연금 금액이 높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 젊었을 때 모든 희생을 다한 것을 계산을 하고 하면 그게 논리적으로 맞겠습니까? 개혁이기 때문에 아프지만…… 그래서 박근혜정부가 지지도가 굉장히 떨어진 요인이 거기 있습니다. 공무원들 등 돌렸습니다.

이 정부가 그런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르코지, 슈뢰더 다 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선례를 안 보시고 지금 와 가지고 그냥 피상적인 측면으로만 개혁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장관님, 답변해 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앞서 성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제도 개혁은 연금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연금은 다른 기초연금과 달리 가입자들이 내는 돈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 말은 가입자들이 그 제도를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가장 우선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안을 내더라도 그것이 가입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도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제도의 시행가능성을 연금개혁 과정에서 중요시해야 되는 요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정말 고려해서 안을 설계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장관님은 비교적 소신 있는 학자로서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장관님 같은 분

이 오셔서 이것 해결 못 하면, 이 개혁의 칼을 쓰지 못하면 다른 장관은 못 합니다,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욕을 들으시더라도, 지금 제출해 있는 이 네 가지 안이 아니고 새로운 안을 더 보장하시고 해서 욕먹을 각오 하고 하십시오. 아니, 장관까지 오셨는데 뭐 더 욕심을 내십니까, 여기까지 올 때까지 다 오셨는데?

이런 것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개혁하시고 그리고 소임을 다하실 만큼 하시고 나서 장관님 진퇴를 결정하셔도 될 듯합니다. 일하다가 관두는 건 괜찮지만 무능해서 일 못 하고 나가는 장관의 불명예를 쓸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성일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성일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 오서 가지고 새로 하신 말씀 잘 새롭게 들으셨으면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공무원연금은 박근혜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는 하지만 결국은 국회에서 사회통합의 틀을 만들어서 처리한 문제입니다. 각 정당과 공무원노조, 시민사회, 모든 사람들이 함께해서 국민적 역량을 모아서 처리했던 사안임을 명심하십시오. 저는 국민연금 개혁 역시 그런 모델들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성주 이사장님,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으실 텐데, 수익률이 2000년대 이래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몇 번이나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2008년이 유일한 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2000년도에도 0.1% 마이너스였고요. 그런데 2001년도에 12%까지 올랐네요. 2008년도에 0.2%였고 올해 마이너스가 꽤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단기적인 운용수익 이런 부분들로 연금 문제를, 연금운용을 평가해야 하니까, 아니

면 장기적인 수익률로 봐야 합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장기적인 수익률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기동민 위원 왜 그렇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2017년에 저희가 수익률이 7.26%였습니다. 벌어들인 수익금이 약 41조 2000억 원 정도였고요. 2018년 때 저희가 추정하기에 약 -1.5% 정도, 액수로 따지면 한 10조 원 정도 손실을 보는 걸로 보이는데요. 2개 연도를 합치면 결국은 30조 이상의 수익금을 거두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12월 31일 대비 올해 1월 16일 시점에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가 상당히 많이 회복됐습니다. 3% 정도 올라서 이미 한 10조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발생한 손실이라고 하는 건 이미 다 회복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최소한 3년 5년 10년을 내다보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기적인 수익률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게 모든 연기금들의 기본적인 투자 전략입니다.

○기동민 위원 그래도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니까, 이렇게 국제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미중 무역분쟁도 있고 주식시장의 상황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서 그런 건 알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해외 연금 같은 경우에도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저는 국민연금은 비교적 선방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이 크시니까 좀 더 고민해서 전략적 자산 배분 문제라든지 단기 수익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최대치를 올려 낼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건 더 필요해 보여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작년을 평가하고 올해 많은 투자운용전략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기동민 위원 그런데 저는 대개 연금운용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대체투자를 늘린다든지 해외자산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건 사실이겠지만 만약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10건 정도 사례가 있는데 그중에 7개 내지 8개 혹은 9개 정도까지 다 성공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단 1건의 부동산 투자 이런 부분들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을…… 저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국민들 이전에 아마 국회에서 저희가 호되게 질책을 받을 것입니다.

○**기동민 위원** 그렇지만 또 국회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면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체제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상호 모순된 주문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에서 하는 얘기고.

정말 답답할 거예요. 그리고 또 수익률이 이렇게 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드리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원칙과 중심을 잘 지켜야 돼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국민 여러분께 끊임없이 설득드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투자 방식들이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배가시켜 나가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국민들과 토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회와도 차분하게 계속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 기금운용본부 내에 대외협력단도 신설해서 국회, 언론,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한 설명들, 보고를 많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런 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전주로 내려가서 우수한 인력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또다시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올려 보내야 된다, 이런 어찌 보면 본질과 다른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마치 그런 부분들이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 것처럼 오도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감 있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부의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어떤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현상을 보고 어떤 견해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CIO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2017년은 CEO, CIO가 다 구속된 상태에서 7.26%의 수익률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작년 10월까지 저희가 사실 플러스 수익률이었습니다. 새로운 CIO가 오고 난 10월 시점에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12월 달이 돼서 그 폭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정확한 현상에 따른 대응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기동민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사실과 다른 것들이 조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동민 위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부단히 멈추지 말아야 될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렇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래서 근무 환경이나 여건이라든지…… 공기업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과거 민간 기업에 있을 때보다 연봉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수익 면에서 후퇴한다면 저는 여기에 대한 매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국가적인 사명감이나 도덕적 책무 이런 부분들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과감한 접근들을 국회에 항상 내고 그런 부분들을 국회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들이 보완되어야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논란과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맞습니다.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처우를 개선하고 급여를 올리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정부의 인건비 통제를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주신다면 저희가 훨씬 더 우수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 여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막 뛰어들어야 돼요. 여야 가리지 않고 다니면서 이런 것 도와주십사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국민연금 이사장이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기동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연 위원** 김성주 이사장님, 19대 때 저하고 같이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소신을 많이 밝히셨는데 그때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입장에 섰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은 좀 더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했고……

○**김명연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다 하면 시간이 없으니깐, 제가 보기에 민주당은 그 당시에 굉장히 반대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연 위원** 그리고 각 단체에서도, 또 해당 당사자인 공무원단체에서부터 민주노총, 그 합의 기구에 온 모든 단체들이 협조를 했으면 아마 이것보다 더 건전한 개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상당히 협조가 안 돼 갖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요. 저는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해서 제시하고 하다 보면 참 유치할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여야가 바뀌니까 내가 책임을 저서 정권을 운영할 때는…… 5년 주기로는 국민연금에 대한 개편안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국회의원이 지금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 질의하는 것에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과거에 하시던 의정활동의 옛 내용들이 떠올라 갖고 참 기분이 씁쓸합니다.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명연 위원** 지금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데들 이런 데들은 현세대들이 연금을 타기 위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까? 거의 그렇지 않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명연 위원** 그만큼 현세대가 부담을 갖고 자꾸 부담을 높이면서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8.7%, 18.5%까지 부과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왜 고민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정권은 노인빈곤을 오로지 국민연금, 기초연금에만 기대고 있어요.

사실 국민이 일을 해서…… 이제 평균 수명이 높아졌다는 것은 근로연령도 높아졌다는 거예요. 생산가능연령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산업생태계를 건전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일을 해서 스스로 살게끔…… 지금 우리 노후세대들이 과거에 배우지 못하고 어려운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는 분들, 이분들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건강하게 평균 수명도 늘어났고 이러면 노후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내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게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봐요, 정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능력이 부족하고 장애가 있고 또 타고나길 좀 힘들게 타고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정부가 연금이나 이런 걸로 채워 드리는 정책은 하지 않고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득대체율 하나 갖고 모든 노인빈곤을 다 해결해야 된다 이거에 딱 차 있어요. 그렇게 해 갖고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현세대에 대한 부담은 표 떨어지니까 과감하게 제시를 못 하면서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은 여기에다가 공개를, 장기적으로 추계를 한 수치를 갖다가 제시 못 해서, 이것도 미래세대에 대해서 부담 준다고 표 떨어질까 봐 자신 있게 공개도 못 하고 이렇게 비겁한 세대가 지금 우리 정치권이에요.

아니, 사람이 태어나서 일을 해서 먹고사는 게 기본이에요. 지금 왜 우리가 연금 개시나 정년퇴직 같은 것 늘립니까? 과거보다 건강해졌으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연령을 늘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모든 방향이 맞춰지고 안 되시는 분들을 갖다가 연금과 기초연금 이런 걸로 채워 나가야 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철학을.

그런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해 보니까 국민연금 노후 소득대체율 갖고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국민들이 일 안 하고 살아요, 노후에는? 지금도 70, 80 되신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은 잘해요,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사회를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기껏 아까 보고하는 것 보면 인구정책 실장은 지금 실패한 정책, 국민들이 싫어하는 정책 이걸 갖다가 고집을 하는, 어울리지 않게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보고나 하고 앉아 있고.

한번 방향을 말이에요, 이걸로 다 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미래세대에 우리가 부담을 주지 않

겠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부담을 늘려야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안이 안 나오겠어요? 그런 안이 나와야지 이게 개편안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김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노후 계층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또 장차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시기는 과거의 산업화 시기에서 소위 IT산업으로 바뀌어 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소위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과거의 연령층이 새로운 신산업에 적응하기가 참 힘든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노년층을 위한 여러 가지 일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말 부득이하게 노인빈곤을 막기 위해서 기초연금이라든지 공적부조를 동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분들이 일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쪽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경제적 환경이 너무 급속히 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정합이라 그럴까 정책적인 준비하고 사회현실의 변화하고는 일정 부분은 미스매치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안전망을 통해서 메워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먼 미래에는 70세든 75세든 훨씬 더 연금 수령 연령이 뒤로 늦춰질 것이고 퇴직 연령도 당연히 늦춰지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해 저희들이 인지를 안 하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걸 논의하기에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그것은 조금 뒤로 미룰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또 미래포럼 같은 데서는 지금 인구변화와 고령화에 대비해서 그런 산업구조도 또 일을 하는 연령 계층의 변화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명연 위원** 짧게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 젊은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 두 분을 부양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명연 위원** 2060년도가 되면 빈곤율이, 노인 인구 비율이 42.6%가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 한 사람이 혼자서 1.2명을 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산업생태계는 계속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인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어지잖아요. 이것을 극복해서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이런 것에 의지하지 말고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데, 인구구조는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데 자꾸 정부가 책임져 주는 정책으로 이 분위기를 몰아가면 도대체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향, 철학을 좀 바꿔달라 그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위원장님, 김명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안 주셔서…… 야당 때 했던 것과 지금 입장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건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연 위원** 3차 질의 때 하세요. 3차 질의 때 내가 직접 질의를 할게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아니……

○**위원장 이명수** 간략히 하세요, 간략히.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김명연 위원** 제가 3차 때 그것 가지고 질의할 테니까요 그때 답변하세요, 3차 질의 할 테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 정의당 윤소하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번 개혁 방안으로 소득보장성과 재정안정화를 함께 도모했다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 제출한 안에는 재정안정화 방안은 솔직히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려요.

복지부는 현행 유지안은 2057년에 소진되는 데

에 비해서 3안 같은 경우에는 2063년으로 6년 늘어납니다, 4안은 2062년으로 5년 늘어나고. 기금소진 시점이 연장됐다고 했거든요.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다음은 어떻게 되지요, 기금소진 시점 이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로는 부과방식비용률을 하는 건데, 그것은 앞으로 더 설계를 장기적으로 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필요보험료율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금소진 시?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가 표는 띄우지 않겠습니다, 하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으니까. 소득대체율 45%일 때 2063년 부과방식비용률은 31.3%, 그리고 이후에는 33%로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출한 안은 마치 기금소진 시점이 이렇게 연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출한 안은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제대로 직시하자고 제가 아까 주장했는데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인 거예요. 본질이 그렇습니다. 사실 재정안정화 방안과는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자꾸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과 연동해서 봤을 때 기금소진 시점 이후에 대한 방안이 없단 말입니다.

아까 인사말씀에요 기존의 재정안정화 대책 중심에서 벗어나서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한다, 계속 공방이다……

이번 방안은 냉정하게 소득보장이 우선이다, 재정안정화는 다음번 개혁으로 미루겠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를 인상 논의도 그래서 이번 논의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안 같은 경우에 3%p가 인상이 되면 2%p 정도는 40%에서 45% 늘어난 소득대체율을 커버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 나머지 1%p는 순수하게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윤소하 위원 아니, 그것까지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닌데 지금 공방의 끝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점을 살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종합운영계획 보고 요약본에 연금 사각지

대에 대한 부분들, 형평성 이야기하는 게 저는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윤소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인 농민의 경우에는 농업인 보험료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임의가입을 해야 되는데 임의가입은 농업인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윤소하 위원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빈틈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거대한 큰 틀의 총론적인 제도개혁도 논의해야 하지만 현실에서 나타나는 작은 문제점, 그렇지만 그분들한테는 절실하잖아요. 이런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걸 시급히 개선해 주시기 바라는데 어떠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2007년 이후 10년 만에 연금제도 개혁하는데 사회적인 합의를, 지금 오늘로서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주장하는 보장성과 안정화와 함께 형평성 부분에 보다 더 방점을 강하게 찍으면서 서로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이번 안이 그나마 정말 새로운 안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윤소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박능후 장관님, 지난 12월 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개편안으로 4개의 정책 조합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의원실에서 국민연금연구원에 요청해서 이 4개의 안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참고로 급여 산식에 적용되는 소득수준은 100만 원·250만 원·400만 원으로, 가입기간은 25년으로 가정하고요. 100만 원 소득자와 250만 원 소득자는 기초연금 대상자 그리고 또 400만 원

소득자는 소득상위 30%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득수준에서 월 납입 보험료를 25년간 납입하고 연금수급 총액은 월 급여액을 20년간 수급한 것으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안과 2안 그리고 3안에서 400만 원 소득자의 월 급여액이 250만 원 소득자의 월 급여액보다 적어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2안의 경우에는 400만 원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만 원 소득자보다 4배 그리고 250만 원 소득자보다 1.6배 많이 납부하지만 월 급여액은 100만 원 소득자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결과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물론 이것은 위원님께서 몇 가지 가정하에서 추계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가정 중의 하나는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에 급여조정이 없다는 전제를 하신 것 같은데, 만약 기초연금을 현재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린다 그러면 대대적인 급여조정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급여조정 그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제시할 때, 대안을 제시할 때도 기초연금 40만 원은 2022년 이후라고만 했지 시기도 특정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간의 급여조정 대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소득역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도자 위원 이렇게 역전 결과가 나온 것은요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을 기초연금과 연계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에 이미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기초연금과 연계됨으로써 연금수급액의 왜곡이 심하게 발생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비켜 가려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국민들한테 쓴 약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도개선을 할 때 방금 김명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욕을 좀 먹더라도 제대로 된 제도개편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겠어요? 내가 낸 만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이잖아요. 국민연금제도가 이렇게 불합리하다고 하면 보험료 저항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각 계층이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개편안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국회에다가 이 안을 사지선다형으로 딱 던져놓고 어떻게 국회에서 얘기가 나오는가 떠보시려는 그런 망각적인 생각은 좀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의지를 가져야지요.

방금 공무원연금제도 개편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김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거기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번에 제대로 된 연금개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희들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금의 장기안정 그리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그 두 가지를 가능한 잘 배합을 해서 연금개혁이 되도록 같이 힘을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최도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장관님, 우리나라 상·하위 소득격차가 심하고 또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45%에 달할 정도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부에서 제시한 네 가지 안 중에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강화 방안을 두고,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신동근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른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장치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만약 현 제도를 연계시키는 것을 아예 없애 버리거나 또 미약하게 연계된 상태에서 기초연금이 대폭 인상되면 일정부분 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가 발생할 것은 사실입니다.

○신동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가입자 비

중은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크지는 않지만. 한 1.56%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초기에는 0.86%였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기초연금 강화 방안이 왜 합리적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발간한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 분석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 이후에 노인빈곤과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전보다 최대 2배 이상 커졌다, 그런 보고 들으신 적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신동근 위원 그런데 기초연금 강화가, 노인빈곤과 소득 불평등에 현금성 지급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에 소득 및 자산 분위에 따른 복지 지출액 현황 자료에서도 이렇게 된 바가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공적이전소득의 대부분은 공적연금, 국민연금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은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라든지 납부예외자 등을 갖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54.7%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신동근 위원 반 이상 그 울타리 밖에 벗어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분들은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핵심 중의 하나가 바로 연금 사각지대 해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저소득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또 농어민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크레딧제도 확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다만 우려스러운 건 이것이 네 가지 안에 밀려서…… 아마 우리 의원실에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완료된 후에 이 문제는 논의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혹시 밀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놓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앞에 있는 공통된 개선안은, 사실은 가장 큰 논의 대상은 정부 내에서 부처 간 합의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이미 동의를 한 사항이라서……

○신동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또 하지지요.

본 위원은 현금성 복지인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제도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면 IMF 이후에 굉장한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신동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30-50 클럽에 들어섰잖아요. 그렇지요? 3만 달러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죽었다고 그래요. 왜냐? 소득상위 10%가 95년에는 29.2%를 차지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45%예요. 미국의 47% 다음입니다. 이렇게 양극화 현상, 그러니까 파이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가져가는 소득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신동근 위원 그리고 또 보세요.

소비와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라고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신동근 위원 다시 말해서 10억 원의 상품을 소비하거나 수출했을 때 몇 명의 취업자가 유발되는지 보니까 1990년 당시에는 내수가 48.2명이고 수출이 46.3명으로 비슷해요, 한 50명가량.

그런데 이게 2014년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수가 15.2 그다음에 수출이 8.1명, 그다음에 우리의 주력인 반도체가 3.6명, 심지어는 장치산업인 석유화학은 1.9명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AI 이후 자동화 과정을 보면 일자리는 상시적으로 없는 게 자연적인 현상이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전체 파이는 커지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신동근 위원 기업의 소득은 커지겠지요. 저는 이것은 기본소득 개념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안 될 거라고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기초연금이라든지 현금성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일전에 이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시다라는 장기적 관점에

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같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소득이 사회보장체계의 어떤 근간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고 여러 형태의 소득이전 형태, 현금성 급여가 여러 형태로 많이 준비되고 성숙되어야만 그걸 나중에 통합을 해서 하나의 기본소득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근 위원** 그리고 김성주 이사장님, 최근에 동아일보를 보니까 국민연금 작년에 기금 10조 까먹었다 이러는데 이게 까먹을 때도 있고 또 많이 오를 때도 있고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신동근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투자수익 누적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기금운용 규모가 637조인데 이게 절반 가까이 소득이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전체 297조가 운용수익금입니다.

○**신동근 위원**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익률 위주로 하다 보면 결국 뭐냐 하면 단기투자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렇지요. 단기 수익률에 집착하게 되지요.

○**신동근 위원** 단기투자, 치고 빠지고 그러면 우리 경제를 오히려 혼란시키겠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률에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수익률도 손해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안 좋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러면 파장이 클 수도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래서 저는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동반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그게 기본적으로 기금운용의 대원칙 두 가지입니다.

○**신동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신동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규 위원** 장관님, 전에 국회의원 오래 하신 위원님들은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지금 자꾸 예로 드는 것이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일단은 성공을 한 것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런데 개혁을 성공하는 과정을 보면 당사자간의 극심한 대립…… 사실은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지요, 대상이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규모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전혀 다르지요, 저희들하고는. 그런 점에서는 좀 관점을 달리해야 될 것이고요.

또 지금 자꾸 비교가 앞으로 몇십 년 뒤의 일인데, 사실은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산아 제한한다고 난리를 친 게 엇그제 같은데, 이것은 참 아주 변동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예측을 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위험하다는 점도 생각해 야 될 건데, 어쨌든 간에 2014년 10월에 야당이 사회적 합의 방식을 통해 연금개혁을 제안하고 이 제안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높아지면서 정부 여당이 이를 수용하고 2015년 1월부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국회에 설치되어 그때 한 3개월간 운영되면서 정부, 공무원 당사자, 국회, 전문가, 공익 대표들이 참여하면서 지난한 논의 끝에 2015년 2월 야당이 연금개혁 대안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급진전하여 개혁에 성공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국회가 대타협기구를 만들면서 그때 아마 여당이 여러 가지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앞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야당이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또 상당히 직설적인 게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급진전하여 개혁에 성공한다고 그러합니다.

아까 야당에서 주장한 대로 그러면 저희들도 야당의 그런 개혁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야당에서 주장하는? 왜냐하면 2015년 그 당시에는 야당에서 개혁안을 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그러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정부가 일단 개혁안을 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야에서, 정치권에서 낸 대안은 저는 아직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윤일규 위원** 그래도 쟁점 중에서, 아까도 제가 조금은 물었는데, 다른 것은 다 비켜 가도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재정건전화 방안 같은 말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 부담률을 올리느냐, 9%에서 다른 선진국처럼 십몇 %까지 올릴 수 있느냐, 우리는 13% 올리는 것 갖고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결국 야당 측 주장은 그것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주장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 세 번째 재정추계를 조사했던 국장님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양성일 인구정책실장님이 2013년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맡으셨는데 그때 그 당시에 재정 상태를 평가하시고 난 뒤에……

지금 우리가 제일, 역시 자금고갈 대책이지요. 오늘도 이야기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자금고갈 대책을 어떻게 안전하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쉽게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돈 많이 내면 나중에 더 주고 일부는 우리가 천천히 주면서 재정을 안정화하는 것은 일반적인 계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논박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은 그 당시 그 일을 직접 담당을 하셨는데 그때 자금고갈 대책은 뭐였습니까?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양성일** 제3차 재정추계는 2060년과 기금소진 연도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깊은 재정안정화 방안의 논의보다는, 앞으로 이런 재정 추이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고민해보자는 정도의 원칙적인 측면만 이야기를 했지 구체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는 안 했습니다.

○**윤일규 위원** 그렇지만 야당 위원님들은 그 당시에 대단한 대책이나 있는 것처럼 지금 정부 측 보고 제대로 대책도 안 하고 저렇게 빠지고 있다고 호통을 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그 당시에 여당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힘들지만 어려운 대책을 갖고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여나 솔직한, 그 당시 대책이 있었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도 지금과 별반 다를 바 없었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양성일**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대책은 제시는 안 했습니다.

○**윤일규 위원** 그 고민은 어차피 변하지 않을 겁니다. 돈을 더 내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이것은 어차피 누구의 잘못보다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서 솔직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 이명수** 마치시겠습니까? 1분 하실 수 있습니다.

○**윤일규 위원** 김성주 이사장님,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조금 의아해하는 게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문제는 재판의 결과를 보고 어떤 행위를 취할 것같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한술 싹둑하고 대우조선해양은 재판 나오기 전에 이미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때는 아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회사에 대해서 행했던 행위의 프로세스하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것을 국민들께 이해가 가게끔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내가 묻고자 합니다. 그때는 1차 재판 하기도 전에 이미 조치를 취했거든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위원님, 저희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기본체계상 공단의 이사장이 투자행위 그다음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거나 보고하거나 지시하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운용 자체는 철저하게 기금본부장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삼성바이오 관련 드린 말씀은 위원님 견해에 공감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대응이 있었던가에 대해서 저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확인한 후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일규 위원** 그게 시중에 도는 신화잖아요. 국가 공권력이 삼성이라는 거대자본권력에 국민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저도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윤일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질의까지 끝이 났습니다.

이어서 3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 지금 자꾸 과거 얘기를 말씀하셔서 저도 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98년도에 1차 연금개혁 하고 그리고 2007년도에 또 한 번 했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승희 위원 2007년도가 노무현 정부 말이에요. 유시민 장관님 계실 때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승희 위원 그리고 나서 곧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이명박 정부였기 때문에 당시에 2차 재정계산을 할 때 이것은 3차 재정계산 시에 검토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는 연금개혁이 미루어졌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3차 재정계산을 할 때, 이때 두 가지 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에는 시간상 여러 가지로 굉장히 버거웠지요. 그래서 10년 동안 연금개혁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자꾸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에 앞서서 앞으로, 그러면 10년 동안 안 했으면 지금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과거 정부를 공격하는 정치적인 발언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느끼고요.

그러면 김대중 정부 때에 국민연금 개혁한 것이, 또 참여정부 때 개혁한 게 뭐니까?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거였거든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승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높이는 거예요. 그 당시의 개혁과 지금의 방향성이 이렇게 달라지고 역행하는 이유가 뭐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앞서 말씀드렸던……

○김승희 위원 그것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승희 위원 그래서 더욱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연금개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표 그리고 국민한테 환심 사는 것, 이것을 먼저 눈앞에 보이게 하고 재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 정권으로 미루게 한다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저도 물론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네 가지 안이 있는데 1안·2안은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안이 아니에요. 손 안 대는 거예요. 공통분모는 쪽 하게 되어 있고 2안은 결국은 기초연금을 올리겠다는 건데 물론 그것도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을 담당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연금개혁안이다, 그래서 그것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개혁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본질을 흐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다층 구조로 해 가지고 나중에 명목소득대체율을 얘기할 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3안·4안인데 3안·4안도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은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개혁안과 역행하는 안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걸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연기금의 수익률하고도 굉장히 관련성이 많잖아요. 당시에 이것을 재정계산을 할 때 수익률을 사점몇 %로 놓고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나온 것도 더 빨리 소진될 수 있고 굉장히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연기금 수익률이 2008년 이후 최저잖아요, 마이너스가. 이것도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단기 수익률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물론 그 원칙에 제가 동의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지금 평균적인 주식 수익률에 해당되는 벤치마크 수익률보다 떨어졌다는 것은 심각하게 원인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고 그리고 대책이 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실액이 얼마인지, 10조다, 10조다라는 것은 평균을 말하는 거고 채권 투자했을 때는 플러스 수익률을 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투자한

것은 그것보다 더 손실액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주식이라는 것은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이 부분의 평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을 장관님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눈가림식으로 해 가지고 장기적인 수익률이 더 중요한 거고 단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 이렇게 피해 갈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도 그것보다 더 까먹는 그런 운영을 가지고.

도대체 뭐 한 겁니까, 국민연금공단은? 전문성 없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대략 시간이 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의 60%에서 40%로 낮춘 1차 개혁 그리고…… 아니, 1차 개혁이 70에서 60으로 낮췄고 2차 개혁이 60에서 40으로 낮췄던 그런 경향성에 비해서 이번에는 왜 45%로 올리려고 하느냐 하는, 개혁의 반대 방향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대체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낮아져서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으로서의 충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안되어서 이번에 3안과 4안은 소득대체율을 45~50%로 인상하는 것이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빈곤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수용성 문제에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3안·4안은 사실은 지난 1·2차 개혁 때 이루지 못했던 연금보험료율을 처음으로 인상하는 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3안이든 4안이든 어느 하나가 채택이 되면 우리가 88년 국민연금 개시 이후에 사실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겁니다.

아까 성일중 위원님께서 3·6·9로 인상되고 있지 않느냐 하시지만 원래 제도 설계는 처음부

터 시작은 9%였습니다. 그런데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첫 5년은, 그다음 5년간은 3%로 낮추고 그다음에 6%로 낮추는 임시적인 방안이었고 국민연금법 자체는 처음부터 9%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보험료율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1%라도 5년에 걸쳐 올리게 된다면 이것은 국민들이 큰 인식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면 이번에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기금운용본부나 또는 보건복지부가 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사실 기금운용위원회가 매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이삼일 전이지요, 이삼일 전에 기금운용위원회를 했을 때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상세하게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 원인 분석 중에서 위탁투자를 한 부분에서 기금 수익이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탁투자를 한 부분에서 낮게 나온 원인을 또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니까 위탁투자를 받은 투자자들이 종목 선정에서 조금 무리한 종목 선정이 있었다는 것으로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는 세심하게 지도를 해서 수익률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희 위원 당시에 연금개혁을 할 때는 노인 빈곤율이 지금보다 더 낮았어요, 옛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말로 뼈아프게 개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안은 대통령께서 50%라고 말씀하셨지만,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김연명 사회수석도 그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초반에 장관님이 제시한 안 보면 어느 정도 개혁을 하려고 하시나 보더라고요 생각했는데 청와대에 보고하고 야단맞고 난 다음부터는 또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신 있게 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 제가 정말 야단 들은 적도 없고요. 전혀 야단하신 적도 없습니다.

○김승희 위원 퇴짜 맞은 게 야단맞은 거예요.

되짜 맞은 게 야단맞은 거지, 야단이 뭐 다른 게 아니지요. 되짜 맞았다, 되짜 맞았잖아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보험료율을 1%씩 5년마다 올리잖아요. 5년마다 올리지만 마지막 세 번 올렸을 때 그 이후에도 또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것 일정한 시차가 있을 겁니다.

○김승희 위원 그래서 언제 몇 %까지 올리는 게 목표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이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정말 가당치 않은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유재중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 장기적으로 우리가 부과방식으로 간다 했을 때 그때 대략 목표 보험료율이 한 20% 내외일 겁니다,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데 20% 내외를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기금이 소진되는 40년 내지 45년 사이에 도달한다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5년에 1%씩 올린다 했을 때. 그래서 저는 계속 5년마다 올릴 필요도 없고 일정 기간 올리고 난 다음에 일정한 휴지기를 두고 그다음에 다시 1%p씩 한두 번 더 올리면 18%까지 바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시된 안은 전 그림을 다 저희가 제시한 안 했지만 전 그림 중에서 저희들이 맡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나름대로는 그림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여하튼 김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거듭 반복되는 여러 가지 답변과 내용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장관님, 지난해 12월에 MBC 라디오에 출연하신 바가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11월 달에……

○김순례 위원 12월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순례 위원 이게 날짜로 정확히 12월 17일인

데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가지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재정안정화 방안을 포기한 것이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재정안정화를 포기했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보험료를 올리는 3·4안이 재정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첫 시작을 보여 주는 거라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 의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 본 국민연금 장기추계 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그대로 둔 1·2안의 연금고갈은 2057년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계산상으로.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58년 수지 적자가 약 287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순례 위원 그런데 3·4안의 경우 연금 지출이 늘어나지만 보험료 수입 증가로 인한 2058년 적자에 있어서 규모가 각각 210조 그리고 233조로 현행을 유지할 때보다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비교적 안정화되는 듯한 느낌을 들고 있어요, 수치로 봤을 때.

그런데 보험료의 인상 효과는 별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2068년 예상 적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477억 원 정도를 유추할 수 있지만 3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483조, 4안은 535조로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현행 유지 때보다 연간 6조 원, 58조 원의 적자가 추가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연금에 대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젊은 세대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지요. 대략 지금 현재 인구의 60~7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인구학자들이 바라보는 내용이 있어서, 이러한 수지의 불균형에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이 편차의 차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상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이러한 연금재정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방안을 재정안정 방안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좀 기만하는 발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지 않습니다.

○김순례 위원 지금 인구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된 수치의 어떤 가늠자가 나와야 될 텐데 이 부분에서는, 수지 불균형에 대해서는 예측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는 거지요,

본 위원을 필두로 해서.

장관님, 또한 지난번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민간위원께서 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국민연금 재정부담을 고스란히 후세의 부담으로 넘기는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아주 참담함을 느낀다’ 이러면서 그냥 사퇴를 해 버렸어요.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것은 재정…… 자문위원 안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연금에 대해서 자문위원이 됐든 실제 위원회, 아까 연금기금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됐든 민간위원께서 이렇게 느낀다고 하면서 비판하면서 사퇴를 했어요. 이게 2018년 12월 18일 자로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위원조차도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너무 회의를 느낀다, 이런 고뇌를 느끼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사퇴를 하는데 국민의 모든 연금의 실질적인 미래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총책임자로서 장관의 어떤 참담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 못 느끼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분이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논의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불만족해서 나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본인의 불만도 수치와 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이지 참석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논의된 안에 대해서……

○**김순례 위원** 대국민적으로 자기가 국민의 연금을 고민하는 입장에서의 의견의 조율이 안 되니까…… 그것인데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이제라도 4개 안의 장기재정추계와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의 상승 이런 것들을 가감 없이 국민에게 소개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마치 국민에게는 어떤 부과라든가 책임 부담성이 없고 그냥 많이 주는 것만 이렇게 쇼를 연출하듯이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이것에 대한 무관한 책임에서 배제되는 행위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요.

보험료 폭탄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를 하셔서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과정의 수순을 가져야지 대통령이 한마디 던졌다고 해 가지고,

대통령 개입이라는 그것에 깜짝 놀라 가지고 1·2·3·4 사지선다형으로…… 요즘 사지선다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백년대계 국민연금, 어쩌면 노후보장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국민의 이런 기금에 대해서 무책임한 안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아직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설명이 많이 부족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족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제 이야기가 몇 차례 이 자리에서 반복이 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있는 것이……

○**김순례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정부의 1·2·3·4안 중에서 가장 고무적이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복지부장관님께서 딱 집을 때 뭘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각 안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제도마다. 그 장점들을 최대한으로 취합을 한 어떤 콤비네이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순례 위원** 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몇 가지 각 안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결합시킨 그런 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례 위원** 콤비네이션을 한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쉽게 답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게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김순례 위원** 입안자로서 답변이 아주 무책임하다고 정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수**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 위원** 장관님, 대통령 주변에는 그동안 연금과 관련된 전문가 이분께서 사회수석으로 가셨고 또 장관님도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안을 조합해서 단일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하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합하지 않고 4개를 던졌다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보고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주무장관이 택하지를 못하고 국민들한테 이것을 내놓으면 도리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개편안 보고를 국회에서 받고 올라온 논란은 뭐냐 하면 연금의 지속가능성, 재정의 건전성, 오늘 이게 주제입니까, 아니면 소득 대체율이 주제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노후소득보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연 위원** 그러면 지금 개편안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안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이것이 실천이 되느냐, 이게 우리의 실무적인 일 아닙니까? 그게 어떤 거냐고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

○**김명연 위원** 소득대체율, 노후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다가 어느 세대에서 끊어질 것 같은, 끊어진다는 결론이 났잖아요. 이것은 돈 문제니까, 결론이 났으니까 이것을 끊어지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40을 드리느냐 50을 드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40이라도 제대로 지속적으로 계속 줄 수 있느냐, 그다음에 산업생태계가 바뀌는 과정에 국민들이 점점 먹고살기 힘들어지고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이 시기에 우리 후세대들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과연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러면 그 후세대에게 과도한 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담을 해야 그것이 실천 가능하냐,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야 입장이 바뀌니까 어떠냐 하고 국민연금 이사장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과거에 이사장께서도 야당 의원 시절에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으로 꼭 차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세금으로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연금으로 100% 다, 보험료율로 다 확보를 못 하면 내야 되는데 재정이 안 되거든요.

김성주 이사장님, 그 당시에 공무원연금으로 하루에 적자 얼마씩 났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정확한 액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김명연 위원** 그때 거의 하루에 80억 정도로 추산해서 나돌던 얘기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지

금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조금 더 늘었겠지요.

○**김명연 위원** 장관님, 혹시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개혁 이후에는 좀 줄어 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명연 위원** 저는 그 당시에 한 100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뭐 80억 내외라고 보자고요. 이것을 옛날에 급여라든지 이런 것에 불이익을 받던 공무원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처럼 공무원들이 비인기 직종이 아니고 굉장히 인기 직종이 됐지 않습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하니, 이제는 급여도 더 어려운 직종이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국민에게 부담을 해서는 안 된다 한 배경이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게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의 TF 간사였던 이사장님이 어떤 인식을 갖고 출발했느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연금을 낮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맞게끔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소득대체율을 50%에 맞게끔 우리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이런 인식을 갖고 출발하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것을 아까 던진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사실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김명연 위원** 공무원연금이 과도하게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국가재정이 어려워지니 이것을 앞으로 향후에 하후상박 개념으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 가자, 그래서 우리가 개혁의 일환으로 접근을 했던 것인데…… 공무원연금을 많이 준다고 줄이지 말고 이것은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 가지고 국민들에게 노후보장을 더 해 줘야 된다 이런 인식으로 출발을 했어요. 이게 안 되면 턱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지금 생각이 바뀌셨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생각이나 지금 생각이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김명연 위원** 그러면 일관성 있게 국민연금을 더 드려서 공무원연금은 그대로…… 지금 일부

개혁이 됐습시다마는 이 수준에 맞게끔, 제일 높은 기준에 맞게끔 모든 공적연금을 똑같이 드려서 노후보장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정치인의 구호…… 정치인은 그런 목표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사장님은 지금 국민연금기금을 총괄하는, 기금운용본부까지 관장하는 연금공단 이사장이세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이나 이거예요. 실천 가능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말씀……

○김명연 위원 57년도면 기금이 고갈돼 가지고 연금 자체가 없어지는데, 이것을 없어지지 않고 하려는데, 그나마 우리가 부담을 더 해서라도 후세들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속 유지하게끔 고쳐 가져가고 하는 판에 아직도 그런 인식을 고집하고 있으면, 그러면 연금을 고갈 안 시키려면 계속 보험료를 높여야 되잖아요. 높인데 우리가 33.5% 여기까지도 지금 추계가 되지 않습니까?

장관님, 인구 저기를 우리가 그때 1.26으로 본 거지요, 이것을 추계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가장 최근에 1.03으로 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명연 위원 아니, 1.05가 안 들어가고…… 원래는 최근이 1.05예요. 그런데 2016년도에 통계청 자료가 1.28인가 1.26인가 그렇지요, 류근혁 국장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잠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연 위원 1.28명이예요. 1.28명인데 왜 이것을 갖다가…… 지금은 우리 합계출산율이 얼마입니까? 1.05지요. 그러면 1.05가 대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6년 데이터를 통계청 자료라고 하면서, 우리가 해마다 통계를 내서 2018년도에 1.05라는 합계출산율이 있는데 2016년도의 1.28명을 대입해 가지고 한 것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험료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올려 가지고 국민들이 그 당시에 그것 내고 건강보험 내고 세금 내고 이렇게 해서 가계가 운영이 되겠어요? 국민들 가계가 운영되겠어요?

그렇게 보험료율이 높아지면 국가가 공무원들 내 줘야지, 기업들은 반을 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이 그 반을 그렇게 많이…… 지금 4.5% 내 주는 것도 허덕허덕하는데 그때 가서 기업들이 그것을 다 내 주려면 기업이 운영되겠느냐고요.

반대로 임의가입자들, 개인이 가입하신 분들은 중소상공인들이 다 망했는데, 생계도 유지가 안 되는데 보험료를…… 연금도 내가 타는 것도 아니고 전 세대 타라고 이것을 주겠느냐고요. 도저히 실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실천 가능성이 없으면 할 수 있는 범위를 하향조정을 해서 국민을 설득시키고 실현을 시켜야지요. 아니, 무슨 철학 하는 분도 아니고 지금 국가 연금을 총괄하시는 분이 그런 정치적 철학을 아직도 고집해 가지고 소득대체율 50% 타령을 하고 앉아 있으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야당입니다. 야당은 문제를 제기하고 또 대안도 내놓을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공무원연금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그래도 반쪽짜리라도 해서 부담을 좀 줄였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방향이 현세대가 부담을 더 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 주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욕먹어 가면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답이 나오는 거고 국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은 그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하고.

그래야 답이 나오지 끝까지, 오늘 회의가 끝날 때까지 대체율 50%에 대한 부분…… 과거에 정치적으로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정치인이 아니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세요. 50%가 가능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이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연 위원 하세요. 50%가 가능한가부터 답변하고 그다음에 하실 말씀 다 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2014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 국회 여야의 생각 중에 일치하는 부분과 서로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치하는 부분은 공무원연금의 부담 수준, 즉 보험료 대비 급여액이 너무 높다, 이것은 조정되어야 된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의 인식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당시 정부 여당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당시 야당은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하더라도 적정한 노후소득 수준을 보장해 준다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당시에 야당은……

○**김명연 위원** 그 걱정하다는 것이 명목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는 건지 딱 명시해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공무원연금 개혁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더 내고 덜 받는 이중의 손해를 반대하는 공무원노조를 설득하는 역할을 야당이 했습니다. 결국은 어떤 식으로 개혁이 합의가 됐느냐 하면, 애당초 정부 여당이 낸 개혁안의 재정절감액은 약 300조 원 정도 됐는데 당시에 야당이 낸 안은 330조입니다. 즉 30조나 더 많은 재정절감 효과를 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야당이 무책임했다, 지금은 입장이 여당이 됐으니까 그렇다고 자꾸 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제가 확인해 드리구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고 하는 당시 여야 대표의 합의가 있었던 것은 심각한 노후소득 빈곤 수준에 비춰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올릴 것인가, 그 방안의 하나로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것에 대해서 여야 대표가 국민들이 지켜보는 TV 생중계로 사인한 겁니다. 그것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여당이 받아들인 거지요. 그런데 그 후에 그런 논의가 일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논란이 다시 되고 있다고 정확하게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명수** 추가로 하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아까 김명연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출산율은 저희들이 나눠 드린 종합운영계획 원본 41쪽에 보시면 거기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안은 통계청에서 제시했던 안을 연도별로 달리해서 넣었고요. 저출산 대안도 있고 출산율 1.05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영한 것도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41쪽에 보시면 그 세 가지, 출산율부터 해서 넣었습니다.

○**김명연 위원** 그것도 내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봤더니 보험료율이 8.2%가 상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설명하는데 이 중요한 것을…… 오늘도 설명할 때 그러면 가장 최근의 합계출산율인 1.05를 대입한 숫자를 얘기해 줘야지, 그래야 국민들이 ‘이 숫자가 우리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율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8명에

대해서 한 수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보험료율이 무려 8.2%가 상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바로잡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서로 보고 있는 자료가 다른지 좀 걱정스럽습니다마는 41쪽에 보시면 기금소진 연도는 기본안, 저출산 대안, 출산율 1.05의 대안 다 2057년으로 동일합니다.

○**김명연 위원** 예, 일단 수치 문제보다는 하여간 우리가 최근의 합계출산율을 대입해서 해야 정확한 추계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성주 이사장님은 지금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서 아직까지도 명목소득대체율 50%를 우리가 이상적으로 보고 가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건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 거냐고 하는 것은 이해당사자, 즉 국민의 판단과 선택에 따른 문제라는 것을 그 당시에든 지금도 원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내용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일단 다행입니다, 그것을 고집을 안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김명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을 안 해야 맞는데 전체적인 진행상 시간적인 제약으로 말씀을 다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차까지 마쳤는데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만 성일종 위원께서 앞서 질의 때 잔여 시간이 있다고 해서 일단 5분으로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장관님, 청와대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청와대 보고안이 뭐였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오늘 나온 안과 거의 유사한 중간보고였습니다.

○**성일종 위원** 언론에 난 것을 봤더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보험료를 12%로 3%p 정도 올리자가 1안이고, 두 번째가 소득대체율을 45% 그냥 놓으면서 11%로 2% 보험료를 올리는 안이 2안, 3안이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보험료를 15%까지 단계적으로…… 물론 단계적인 것은 긴 시간을 얘기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

자 해서 3개 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게 맞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지 않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언론에, 조선일보에 난 것 11월 7일 자가 틀린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조선일보에서 뭘 기초로 그것을 발표했는지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청와대에 보고했던 안이 어떤 겁니까? 1·2·3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청와대에 어떤 확정된 안을 올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중간보고를 올린 겁니다.

○성일종 위원 그 중간보고한 안이 어떤 거였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전에 자문위원들이 났던 안도 넣고 또 저희들이 지금 담고 있는 3안·4안도 넣고 그렇게 해서 같이 여러 가지 안이었습시다.

○성일종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청와대까지 가는데 A안·B안·C안 딱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 것이……

○성일종 위원 실장님, 청와대에 났던 안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이것 아닙니까, 언론에 난 것? 틀려요?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양성일 언론에서 여러 가지 기사를 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간보고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양한 조합 속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답이 언론에 나왔던 것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에 났던 안을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것은 힘듭니다.

○성일종 위원 왜 힘들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행정 정책을 결정하는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성일종 위원 장관님,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언론에 났는데 제가 이 고민을…… 펴뜩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이 났느냐? 청와대에 도 대체 보고를 어떻게 했기에 대통령께서 그것을 다시 검토하라고 했을까, 내가 대통령이라면 우리 관료들이 낸 것보다 국가를 위해서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지시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째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이게 자꾸 물러터지고 후퇴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국가의 대통령은 항상 100년, 200년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찾아봤더니 이 안대로 한다면 복지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1안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안하고 유사해요. 2안과 3안은 아주 진일보한 안이에요. 살림을 제대로 해 보려고 하는 안이에요. 현행 소득대체율 그대로 놓고 보험료 올리고, 세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내리고 보험료를 더 장기적으로 건자 해 가지고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 정말 긍정적인 방향으로 쫓는 거예요.

저는 복지부의 관료들 믿습시다.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하자고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가면 비교적 나라가 괜찮다는 거예요. 청와대에 가 가지고 다시 수정돼 가지고 지금 와 있는 안은 미래가 없는 안입니다.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30년, 100년을 준비하는 거지 어찌 이게 정쟁의 요소이거나 표생각해서 이것을 후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성일종 위원 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께서 지금 1·2·3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조금 무리스럽다고 생각이 들지만 조금 더 의아한 것은 이 1·2·3안하고 오늘 제가 보고한 3·4안하고 어떤 차이가……

○성일종 위원 장관님, 3·4안은 소득대체율도 올리고 보험료도 올리는 거예요. 2개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요율만 다르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성일종 위원 여기의 2안과 3안은 소득대체율을 현재 상태로 놓고 보험료를 올리는 것하고 소득대체율을 내리면서 보험료를 올리는 거예요. 이 방향이 맞는 거예요. 아니, 저희 야당인들 이것 올리자고 그러면 국민한테 표 잃을 텐데 이걸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위원님이 제시한 1안은……

○성일종 위원 이게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라서 저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청와대에 보고한 안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위원님이 제시한 1안은 저희들이 오늘 제시한 4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성일종 위원** 1안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2안은 오히려 저희들이 제시한 3안보다 1%p 낮은 보험료율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이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큰 금액이기는 한데 그것 1% 정도의 차이야…… 어쨌든 이 방향에서 2안과 3안은 정말로 우리가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리 가야 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 2안보다도 더 고통을 담은 것이 저희 안의 3안인 것입니다.

○**성일종 위원** 어떻게 3안입니까? 소득대체율도 올리고 보험료도 같이 올리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득대체율 45%로 상향이라는 것이 같고 보험료율……

○**성일종 위원** 이게 상향이 아니고, 지금 현재 소득대체율이 45%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성일종 위원** 그렇습니다. 여기에 ‘상향’이라는 말을 잘못 썼어요. 소득대체율을 현 상태로 그냥 놓고 2%를 올리는 거예요, 보험료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일보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3안은 보험료를 3% 올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일종 위원** 지금 공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일을 잘했구나, 열심히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언론상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언론에 난 것 보면 이것은 맞는 것 아닌가, 왜 이 방향을 놔두고 자꾸 약한 쪽으로, 국민들이 듣기에 좋은 쪽으로만 그냥 이 정책의 흐름을 자꾸 약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2안은 45%이면서 보험료는 11%인데 오늘 제가 보고드린 3안은 45%에다가 12%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예, 3안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리고 4안은 여기에 나와 있는 1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성일종 위원** 어찌 됐든 그래도 이 안에 나와 있는 3안이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내 준 3안이 2안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어쨌든 소득대체율을 지금 현재의 동결 상태로 놓고 보험료를 더 올리는 것을 생각하셨어요. 3안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개혁 방향이 맞다고 보여져요. 최소한 2안 정도로는 가야 될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안을 보면…… 청와대에 가서 왜 이게 자꾸 약화되고 있는가 하는 이것에 대한 의문이에요. 그래서 청와대에 보고한 안이 도대체 뭐냐, 제가 그걸 여쭙본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위원님이 제시한 안 중에서 오늘 제가……

○**성일종 위원** 아니, 제가 제시한 안이 아니고 언론에 난 안입니다, 조선일보 11월 7일 자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오늘 국회에 보고드린 안과 큰 내용의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고, 청와대는 그 당시에는 중간보고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떤 확정된 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다양하게 방법들을 논의, 선택지를 놓고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성일종 위원** 안이 없는데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셔서 가지고 이것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타협을 해서 갖고 오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분명히 그 안이 있지. 그렇잖아요, 장관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도 그렇네. 여기는 내년 보험료를 11%로 올린다고 그랬고 장관님이 낸 것은 5년인가 그렇지요? 이것 좀 달라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5년에 1%p씩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이것도 달라요. 2안도 달라요. 이것은 내년도부터 보험료를 11%로 올리자는 거고요, 2% 올리자는 거고. 지금 장관이 내놓은 3안도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정말로 청와대…… 우리 관료들이 국가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올렸는데 청와대에서 이것을 더 좀 허물어서 내려보낸다고 한다면 이것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께서……

○**성일종 위원** 장관님, 하여튼 청와대에 내셨던 안을 좀 알려 주시고요.

김성주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성일종 위원 지금 연금의 운용 틀 안에서 운용을 더 잘 해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국민들이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원칙은 갖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확고하지요.

○성일종 위원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성일종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낼 때 연금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함께 만들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저희 국민연금연구원의 박사들이……

○성일종 위원 그러면 국민연금연구원의 박사들이 만든 안은 있었습니까? 정부한테 주셨을 것 아니에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내부 토론용 시뮬레이션들을 한 적은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렇다면 연금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금 나름대로 650조를 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계하는 것, 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고민해 가지고 ‘이 정도에서 우리가 안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렇게 타당한 로직(logic)성을 가지고 복지부를 설득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것 안이 없다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저희도 비공식적으로 복지부하고 많은 협의를 하나요, 그런 의견들을 당연히 주고받았을 거라고 제가 보고요.

○성일종 위원 그 안을 가지고 가셨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안도 없이 가 가지고 의견만 전달 하셨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다만 저희는 집행 기관이고 정책에 대한 주도적 결정은 복지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어떤 구상을 하면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를 드리는 그런 역할은 해 왔습니다.

○성일종 위원 저는 이사장님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대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저도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은.

○성일종 위원 연금은 연금 나름대로 운용을 하면서 과거의 실적에서부터 앞으로의 경제 예측까지 틀리더라도 나름대로 안을 확고하게 가지고

복지부를 설득하고 청와대를 설득하셔야 됩니다.

이사장님, 지금 굉장히 소극적으로 얘기하세요. 기관장은 650조, 앞으로 늘어나게 될, 1000조가 되고 2000조가 될 이 기금에 대해서 굉장한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 각오 없이 그 자리에 오셨다고 그러면 문제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저희가 왜 그런 노력을 안 기울였겠습니까? 그러나 정책……

○성일종 위원 지금 현재 국민연금에서 복지부나 청와대에다 주셨던 안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특별하게 제출된 안은 없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도 없이, 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아무런 안도 안 만들고 그냥 복지부에 가 가지고 협의만 하고 의견만 던지고 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현재 의사결정 구조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들이 좀 더 주도적인 의견을 내고 제안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성일종 위원 이사장님, 연구원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A안, B안, C안 가면 복지부에서 받아 가지고 실장님하고 공직자들이 보면서 자기 아이디어 조금씩 넣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그것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달라고 할 것 같으니까 지금 없다고 그러시고, 사람 파견해서 그냥 의견 낸다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외국 선례 모든 것 다 연구해 가지고 외국은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 고민해 가지고 안을 가지고서는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아주 이상적인 안들은 누구나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그것이 현실에서 채택되느냐라고 하는 수용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위원 아휴, 자꾸 빠져나가시니 이것 참……

알겠습니다. 아까 재정건전성 같은 것을 얘기할 때 연금 이사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노후소득보장이라고 하는 말을 하셨어요. 노후소득보장은 연금 범위 내에서 해 줘야 되는 거고 수익을 잘 내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지금 이외에 플러스알파 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요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연금을 가지고 개혁을 해야 되니 이것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담은 페이지가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하여튼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연금연구원이 따로 계시구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국민연금연구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연구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연구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데인데 자칫하면 국민연금 개선안과 관련해서 보조적인 역할만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저도 좀 아쉬운 말씀입니다.

아마 나름대로 말씀 못 하신 이유가 있겠습니까만 평소에도 연구원은 국민연금 이것만 꾸준히 연구하는 전담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사장으로 오고 난 다음에 과거에 비해서는 활발하게 자기 의견과 주장을 많이 펼치는 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연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명수 의사진행발언?

○김명연 위원 예.

○위원장 이명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김명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명연 위원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김명연 위원 연구원에 박사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몇 분 계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전부 35명입니다.

○김명연 위원 서른다섯 분이요? 엄청난 운영비가 들겠군요.

지금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갖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연구원에서 자체안 정도의 검토도 안 했다, 이것 누가 믿겠어요?

내가 보기에 여러 가지 자체안들을 그 안에서 만들었을 텐데 그것과 지금 1·2·3·4안,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정부에서 낸 안과 차이가 있을 때 그 자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까, 갑자기

기 그런 걱정이 앞서 가지고 걱정 때문에 안 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국민이 박사가 30명이 넘는 그런 연구원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 해마다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료들이 나올 것 같은데 없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데요. 진짜 없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그것은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에 연구원 박사들이 간사로 참여해서 같이 토론하고 자료도 드리고 해 왔고요.

○김명연 위원 자료라는 것은 기초 자료만 찾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그런 데이터를 도출 안 해 봤다는 얘기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기본적인 자료들, 추계 자료들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통계들을 통해서 제출하고……

○김명연 위원 그러면 안이 있는 거네요. 추계자료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따른 재정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자료들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분석해서 제출하고 그렇습니다.

○김명연 위원 있기는 있는 거지요, 하기는 했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김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수고하셨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기동민 위원 질의성 진행발언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월 국회가 하한기인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는 임세원 의사 선생님 사망사건 관련해서 준비하고 제도적 보완책 만들고 그러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물론 국민연금 개편안이 12월에 보고됐지만 1월 지금이라도 이렇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현안들을 짚어 본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행하는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안들이 4개가 나왔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4개를 평면적으로 나열했는데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정부도 명료한 자기 입장들을 갖는 과정들, 갖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이야 수평적 차원에서 안들이 제출되었지만 조금 더 토론들을 진행하다 보면 사람들의 의견이 모일 거고 국민들의 마음이 모일 텐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수동적으로 그냥 놔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함께 해서 모두가 통일된 안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주도적으로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 오늘 주신 말씀이야 그 처지에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후의 과정들은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책임 있는 안을 갖기 위한 복지부 차원의 독자적인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이사장님께 좀 주문하고 싶은데요. 아까 회의 진행과정 속에서 말씀드린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어디에 있든간에 650조라는 엄청난 자금을 운용하는 실체에 맞게, 조직에 맞게 내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수한 인재를, 검증된 인재를 데려오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국회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평등적으로, 일률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만 열심히 하고 책임 있게 임한다면 국민연금에 좀 특수하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진전된 고민을 같이 나누었으면 하고요. 다음번 보고에는 그런 정도 안들이 좀 포함되어서 이렇게 개선되고 있고 개선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막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 결과를 한번 말씀 주시기 바라구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장관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스튜어디스 코드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고민들이 많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정제된 답변들을 주셨기는 한데요. 저는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매번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적으로 의

혹이 있고 주주권이 침해를 받고 시장가치가 훼손되고 이런 명백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으로서의 역할들을 망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국민에 대한 배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핀포인트라고 그러지요, 딱 집어서 뭔가 확실하게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효과가 국민들 속에 검증되었을 때 국민연금의 신뢰성 역시 제고되어서 국민연금 개편 노력에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장관님께서 각별하게 프로세스 관리도 잘 해 주시고 국민들께도 잘 설명 주셔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국민연금이 신뢰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작용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실 말씀 있으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기동민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오늘은 저희들이 국회에 제출하는 연금재정 개선안을 하고 또 종합운영계획안을 내는 첫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한 저희들의 어떤 주관적인 의사나 방향성은 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언급을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논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안이 모아지리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분명하게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튜어디스 코드 관련해서는 정말 양날의 칼입니다. 이것이 함부로 행사되면 민간기업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고 또 이것이 무디게 행사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든지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또 꼭 제가 이대로 올린다고 보장할 수 없고 이 정부가 오래간다고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자리에 오건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엄정하게 객관적인 데이터 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선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쓸데없는 간섭이 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민간기업이 도덕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 질의는 마치고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 요청하신 위원들이 계십니다.

남인순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1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과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늘 논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여야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제기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국민연금의 정말 바람직한 방향과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로 더 검토하고 계속 고민해서 최종 선택이 먼 훗날 평가를 받더라도 정말 잘 선택했다 이런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국회에서의 논의 문제는 여야 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일정과 그 논의 과정, 방법론에 대한 협의가 되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애쓰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기동민	김광수	김명연	김상희
김순례	김승희	남인순	성일종
신동근	오제세	유재중	윤소하
윤일규	이명수	정춘숙	최도자

○청가 위원(5인)

맹성규	신상진	이개호	장정숙
전혜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희
전문위원	송병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관	박능후	
차관	관	권덕철	
기획조정실장		김강립	
인구정책실장		양성일	
정책기획관		박민수	

연금정책국장	류근혁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
기획이사	박정배
기금이사	안효준
국민연금연구원장	이용하
기획조정실장	류승락
가입지원실장	정갑수
연금급여실장	유동완
운용전략실장	박성태
수탁자책임실장	최성제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윤종필	성일종	자유한국당	2019. 1. 18.

○의안 회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1. 8. 윤일규·윤소하·강훈식·남인순·신동근·안호영·이규희·박홍근·전혜숙·기동민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1. 8. 윤일규·윤소하·강훈식·남인순·신동근·안호영·이규희·박홍근·전혜숙·기동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9일 회부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 9. 김승희·김상훈·임이자·전희경·김성찬·金成泰·박덕흠·이은권·송언석·김종석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 9. 김승희·김상훈·임이자·전희경·김성찬·金成泰·박덕흠·이은권·송언석·김종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10일 회부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9. 1. 11. 남인순·윤후덕·금태섭·백혜련·김병기·맹성규·박홍근·신창현·정춘숙·윤일규 의원 발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 1. 11. 정부 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19. 1. 11. 김종민 · 손금주 · 송기현 · 윤후덕 · 신창현 · 고용진 · 한정애 · 김해영 · 송갑석 · 전재수 의원 발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19. 1. 11. 유의동 · 유승민 · 주승용 · 최도자 · 채이배 · 김삼화 · 김관영 · 김재경 · 김성원 · 오신환 · 성일종 · 金成泰 의원 발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19. 1. 11. 김종민 · 표창원 · 윤준호 · 송기현 · 금태섭 · 주승용 · 윤후덕 · 신창현 · 고용진 · 김해영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9. 1. 11. 전혜숙 · 천정배 · 장정숙 · 김병기 · 이찬열 · 김영진 · 김철민 · 신용현 · 주승용 · 우원식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9. 1. 11. 전혜숙 · 천정배 · 장정숙 · 김병기 · 이찬열 · 김영진 · 김철민 · 신용현 · 권칠승 · 우원식 의원 발의)

이상 7건 1월 14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9. 1. 14. 기동민 · 맹성규 · 전현희 · 이재정 · 정춘숙 · 정세균 · 김상희 · 김경협 · 전혜숙 · 이철희 · 남인순 · 신동근 · 인재근 · 민병두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 발의)

(2019. 1. 14. 김명연 · 김종석 · 김태흠 · 박명재 · 윤종필 · 이명수 · 이완영 · 정갑윤 · 정유섭 · 주호영 · 김상훈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9. 1. 14. 전혜숙 · 천정배 · 장정숙 · 김병기 · 이찬열 · 김영진 · 김철민 · 신용현 · 윤일규 · 우원식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15일 회부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 발의)

(2019. 1. 15. 장정숙 · 김중희 · 김세연 · 김경진 · 박찬대 · 김석기 · 정춘숙 · 유성엽 · 김순례 · 윤소하 의원 발의)

1월 16일 회부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

(2019. 1. 16. 곽대훈 · 추경호 · 김기선 · 성일종 · 윤영석 · 김규환 · 강석호 · 이종배 · 김정재 · 송언석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 발의)

(2019. 1. 16. 김순례 · 정유섭 · 정태욱 · 임이자 · 윤종필 · 황영철 · 장정숙 · 안상수 · 원유철 · 서청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17일 회부됨